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총괄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승룡 경제분석관

작성 | 한승룡 김상용 천경록 홍지은 백기홍
황종률 김원혁 설경원 경제분석관

지원 | 성혜정 행정실무관
강태웅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1장 개관

- I. 의의 및 추진체계 / 3
- II.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 6
 - 1. 현황 6
 - 2. 자원배분 및 주요 증감 요인 9
 - 3.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배분 및 주요 증감 사업 11

제2장 총괄 분석

- I. 분석의 핵심 내용 / 15
- II.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및 성과관리 실효성 / 18
 - 1. 2025년 성과평가 결과의 2027년도 예산서 반영 및 환류 18
 - 2. 반복 지적 사업을 통한 성과관리의 지속성 점검 23
 - 3. 성과평가 환류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31

제3장 중점 분석

- I. 기본계획과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 / 35
- II. 일·돌봄·소득의 구조적 성별격차와 성인지 예산제도 / 41
- III. 제4차 기본계획에의 시사점 / 53

제4장 부처별 분석

- I. 부처별 성인지 예산 분석결과 종합 / 65
- II. 부처별 분석 / 71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1
 - 2. 교육부 75
 - 3. 법무부 79
 - 4. 국방부 83
 - 5. 행정안전부 87
 - 6. 문화체육관광부 93
 - 7. 농림축산식품부 98
 - 8. 보건복지부 103

9. 고용노동부	109
10. 성평등가족부	114
11. 국토교통부	125
12. 중소벤처기업부	129

부록: 국제성평등지수

1. 국제성평등지수 현황과 분석 대상	135
2. 성격차지수(GGI)	137
3. 유리천장지수(GCI)	142
4.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사점	146

제1장

개관

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의의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부문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의 작성, 성인지 결산 및 기금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의 작성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이 기금사업까지 확대되고, 성평등 기대효과·성별 수혜분석·성과목표 등이 주요 분석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2021년부터 협의회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¹⁾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예산의 성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로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다.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1)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성인지 예·결산 추진체계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추진체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2), 제28조의2³⁾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예산과 결산의 소관기관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결산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며, 각각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작성지침 및 작성서식과 함께 각 부처에 배포한다. 작성 관련 교육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예·결산서 작성 지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작성한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해분석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해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4)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평가·심의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각 부처는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한다. 각 부처가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결산서는 재정경제부가 취합하여 검토 후 예산안·결산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성인지 예·결산 추진체계]

구분	담당기관	역할 및 기능
제도 총괄	기획 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대상사업 선정기준 포함) 수립 및 통보 •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제작 •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취합·검토 및 국회 제출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주관)
	재정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제작 • 부처별 성인지 결산서 취합·검토 및 국회 제출
제도 지원 및 협조	성평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제작 협조(지원)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 지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지원)
	성인지 예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 성인지 예·결산서 자료 취합 지원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II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1

현황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은 33개 중앙관서의 27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26조 8,789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 중앙관서 수는 34개에서 33개로 1개 감소하였으나, 대상사업 수는 265개에서 274개로 9개(3.4%) 증가하였다. 전체 성인지 예산규모는 2026년 26조 8,544억원 대비 245억원(0.1%) 증가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2026년 196개에서 2027년 200개로 4개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12조 3,059억원에서 11조 2,664억원으로 1조 395억원(8.4%) 감소하였다. 반면 기금사업은 같은 기간 69개에서 74개로 5개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도 14조 5,485억원에서 15조 6,125억원으로 1조 640억원(7.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성인지 예산에서 기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54.2%에서 2027년 58.1%로 확대되었다.¹⁾

[2026~2027년도 성인지 예산 총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중앙관서 수	34	33	△1	△2.9
예산사업 수	196	200	4	2.0
기금사업 수	69	74	5	7.2
전체 사업 수	265	274	9	3.4
예산사업 금액	123,059	112,664	△10,395	△8.4
기금사업 금액	145,485	156,125	10,640	7.3
전체 예산규모	268,544	268,789	245	0.1

주: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 9.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 1) 일반·특별회계 사업의 예산 감소와 기금사업의 예산 증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사업 일부가 이관된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회계별 예산 증감에는 개별사업의 실질적인 예산 증액·감액뿐만 아니라 회계·기금 간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성평등가족부가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31개, 보건복지부 2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개, 문화체육관광부 18개 순이다. 법제처와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이 있었으나 2027년에는 별도의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고²⁾, 국세청은 2026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2027년에 1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2026~2027년 부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기 관	2026 예산		2027 예산안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국회	1	342	1	401
대법원	1	7,700	1	7,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312,529	19	302,532
교육부	10	342,704	10	353,018
외교부	7	132,061	6	44,921
통일부	7	52,304	7	57,863
법무부	7	116,399	7	113,725
국방부	7	96,685	7	84,691
행정안전부	4	3,197	4	3,143
국가보훈부	1	4,210	1	1,040
문화체육관광부	19	290,435	18	355,587
농림축산식품부	10	294,751	10	310,345
산업통상부	6	9,716	7	15,002
보건복지부	28	5,716,059	28	6,308,482
기후에너지환경부	4	21,955	4	9,862
고용노동부	32	9,341,223	31	8,445,253
성평등가족부	34	1,700,855	47	1,738,821

2) 법제처의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을,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세부사업 중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내역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단위: 개, 백만원)

기 관	2026 예산		2027 예산안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국토교통부	2	236,099	2	244,335
해양수산부	12	27,495	10	23,009
중소벤처기업부	22	8,010,392	15	7,039,115
기획예산처	1	1,130	7	1,284,454
인사혁신처	1	3,730	1	5,039
법제처	1	1,474	-	-
지식재산처	4	16,471	2	5,789
국가인권위원회	2	159	2	220
국민권익위원회	1	8	1	8
국세청	-	-	1	4,157
경찰청	7	53,679	7	52,408
국가유산청	2	1,620	2	1,668
농촌진흥청	7	16,061	8	18,319
산림청	2	6,837	2	6,839
질병관리청	1	2,594	1	2,59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9,675	2	23,629
새만금개발청	1	5,410	-	-
해양경찰청	2	8,445	3	15,495
총계	265	26,854,404	274	26,878,915

주: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2027년도 성인지 예산을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영역³⁾별로 살펴보면, 고용 영역의 예산규모가 13조 8,130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돌봄 영역이 6조 6,620억원(24.8%), 소득 영역이 3조 33억원(11.2%), 교육 영역이 2조 4,754억원(9.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돌봄 영역의 예산규모를 합산하면 전체 성인지 예산의 76.2%에 해당하며, 소득 영역까지 포함하면 87.3%에 이른다. 반면 건강, 양성평등의식, 여성폭력 및 의사결정 등 나머지 4개 영역의 예산 비중은 합계 3.4% 수준에 그쳤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는 고용 영역이 71개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67개, 양성평등의식 43개, 돌봄 34개 순이었다. 영역별 사업 수를 합산하면 총 280개로 실제 성인지 대상 세부사업 수인 274개보다 6개 많은데, 이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복수의 내역사업이 서로 다른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액은 내역사업별로 해당 영역에 귀속시켜 중복 없이 집계하였다.

전년대비 재원배분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돌봄·교육 영역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소득 영역의 예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고용 영역의 예산은 2026년 12조 6,333억원에서 2027년 13조 8,130억원으로 1조 1,797억원(9.3%) 증가하여 8개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고용 영역의 예산 비중은 2026년 47.0%에서 2027년 51.4%로 상승하였다. 돌봄 영역 역시 전년 대비 4,816억원(7.8%) 증가하였으며, 교육 영역은 1,765억원(7.7%) 증가하였다.

반면 소득 영역의 예산은 2026년 4조 6,986억원에서 2027년 3조 33억원으로 1조 6,953억원(36.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사업 수 역시 20개에서 12개로 8개 감소하였으며, 전체 성인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5%에서 11.2%로 약 6.3%p 하락하였다. 이 밖에 여성폭력 영역은 562억원(21.6%),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344억원(12.0%), 의사결정 영역은 261억원(31.2%) 감소하였다.

3) 2023년 개정된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구분은 7개(의사결정, 교육, 고용, 소득,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이며,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여성폭력'을 추가하여 총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영역	2026년 사업 수	2027년 사업 수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액(C) (B-A)	증감률 (C/A)
고용	71	71	126,333	138,130	11,797	9.3
돌봄	30	34	61,804	66,620	4,816	7.8
소득	20	12	46,986	30,033	△16,953	△36.1
교육	59	67	22,989	24,754	1,765	7.7
건강	21	22	4,140	4,127	△13	△0.3
양성평등 의식	38	43	2,855	2,511	△344	△12.0
여성폭력	21	21	2,599	2,037	△562	△21.6
의사결정	12	10	838	577	△261	△31.2
합계	272	280	268,544	268,789	245	0.1

주: 1) 영역별 사업 수는 중복을 포함하며, 중복을 제외한 2027년도 세부사업 수는 274개임

2)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원배분 변화의 주요 특징은 고용과 돌봄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는 가운데, 소득 영역의 예산이 일부 대규모 용자사업의 감액과 사업 개편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용자)’ 사업은 2026년 본예산 3조 3,620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2조 2,700억원으로 1조 920억원(32.5%) 감소하였다.

한편, 일부 창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회계·기금 간 이관과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재분류에 따라 영역별 예산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패키지(초기, 도약),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내역사업과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중 ‘재도전성공패키지’ 내역사업은 2027년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성인지 대상사업에 계속 포함되었으며, 고용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 중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내역사업과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 중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 역시 기존 소득 영역에서 고용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고용 영역의 예산 증가와 소득 영역의 예산 감소를 평가할 때에는 개별 사업의 실제 예산 증감과 영역 재분류에 따른 변동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을 실제 사업 소관부처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예산규모가 9조 3,660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부 7조 3,477억원, 보건복지부 6조 3,085억원 순이었다. 이들 3개 부처의 예산규모는 총 23조 222억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85.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평등가족부 1조 7,38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556억원, 교육부 3,5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전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26년 5조 7,161억원에서 2027년 6조 3,085억원으로 5,924억원(10.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652억원(22.4%), 성평등가족부가 380억원(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0억원(9.6%), 고용노동부가 248억원(0.3%)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6,626억원(8.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외교부 역시 전년대비 871억원(66.0%) 감소하였으며, 국방부는 120억원(12.4%), 지식재산처는 107억원(64.9%), 새만금개발청은 54억원(100.0%) 감소하였다.

[2027년도 주요 부처별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2026년(A)	2027년(B)	증감(B-A)	증감률
증가	보건복지부	57,161	63,085	5,924	10.4
	문화체육관광부	2,904	3,556	652	22.4
	성평등가족부	17,009	17,388	380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25	3,425	300	9.6
	고용노동부	93,412	93,660	248	0.3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80,104	73,477	△6,626	△8.3
	외교부	1,321	449	△871	△66.0
	국방부	967	847	△120	△12.4
	지식재산처	165	58	△107	△64.9
	새만금개발청	54	-	△54	△100.0

주: 1)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임

2) 2027년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6개 세부사업(1조 2,830억원)은 실제 사업 소관부처에 귀속하여 집계하여, 앞절의 총괄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계속사업 가운데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용자)'으로, 전년대비 3,840억원(29.4%)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이 3,343억원(11.9%),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약지원자금(용자)'이 2,275억원(37.1%)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이 1,982억원(4.9%), '내일배움카드(일반)'가 983억원(15.7%) 증가하였다.

반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계속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용자)'으로, 전년대비 1조 920억원(32.5%)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역시 3,150억원(31.1%) 감소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장기업지원자금(용자)'은 2,077억원(12.2%),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고보)'는 980억원(19.3%) 감소하였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963억원(16.1%) 감소하였다.

[2027년도 주요 계속사업의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률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자금(용자)	13,058	16,898	3,840	29.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28,164	31,508	3,343	11.9
	중소벤처기업부	제도약지원자금(용자)	6,125	8,400	2,275	37.1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40,728	42,710	1,982	4.9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6,273	7,256	983	15.7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용자)	33,620	22,700	△10,920	△32.5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128	6,978	△3,150	△31.1
	중소벤처기업부	성장기업지원자금(용자)	16,975	14,898	△2,077	△12.2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5,090	4,110	△980	△19.3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5,978	5,015	△963	△16.1

주: '창업기업지원자금(용자)'와 '성장기업지원자금(용자)'는 2027년도에 각각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신성장기반자금(용자)'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2026년은 변경 전 사업의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장

총괄 분석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개별 사업의 예산서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고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차년도 사업에 환류되고 있는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성인지 재정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돌봄·소득 분야의 구조적 성별격차에 현행 정책·재정수단과 성과관리체계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서 반영과 기본계획 관련 사업의 관리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기재 또는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넘어 실제 사업운영의 개선과 정책목표 수준의 성과로 연결하는 체계는 여전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개별 사업의 여성 참여율 또는 성별 수혜비율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성별 격차와 정책적 장벽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재정사업의 설계·예산편성·성과관리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 성과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환류 강화 필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사항의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서 반영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분석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 사업의 성과관리 또는 운영방식이 개선된 것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 가운데 상당수에서 성별 결과 지표의 부재,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소극적인 목표 설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평가결과의 기재 여부보다 실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사업이 어떠한 성별 격차 또는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참여인원·지원건수·만족도 등의 산출지표를 넘어 취업, 경력유지, 자립,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성인지 예산서 간 연계 강화 필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일정한 연계가 확인되었으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포괄적으로 기여하는 간접연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성인지 예산사업과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정책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 이를 이행하는 재정사업 간 관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과제-연도별 시행계획-재정사업 간 연계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 포함여부와 미포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별 재정투입 현황과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관리 적절성을 점검하고, 사업 개편이나 소관 변경 이후에도 정책목표와 재정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구조적 변화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할 필요

일·돌봄·소득 분야의 구조적 성별격차를 살펴본 결과, 출산 전후 여성의 고용지속과 30대 성별 고용률 격차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역시 축소되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크며, 고용형태·임금 등의 성별격차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재정사업의 참여인원, 성별 수혜비율 또는 연간 성과지표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성별격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개별 사업의 성과가 정책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별 수혜분석은 사업의 접근성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지표로 유지하되,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동일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사업군의 증기성과-정책목표 수준의 구조적 성별격차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위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참여 이후의 고용지속, 돌봄시간, 고용형태, 임금 및 근속기간 등 실제 삶의 변화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돌봄·고용·소득 등 서로 연계된 성별격차가 생애과정과 인구·경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인지 재정운용의 분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 재정운용을 특정한 여성 관련 사업의 수혜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재정사업을 포함한 정부정책이 구조적 성별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선정 및 운영체계 보완 필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지정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특정 정책영역의 주요 재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한 분야를 계속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정 분야를 사전에 고정하기보다 구조적 성별격차의 수준과 변화, 정책적 대응 필요성, 주요 정책수단과 재정사업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분야와 중점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점분야가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성인지 예산사업을 일률적으로 포함하기보다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재정사업을 선별하고, 동일한 정책문제와 정책수단에 대응하는 사업을 사업군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와 사업군의 증기성과 및 구조적 성별격차를 함께 점검하여, 격차가 개선되거나 정책환경이 변화한 분야는 중점관리 대상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수요가 나타난 분야는 추가하는 등 중점사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후 예산편성과 차기 기본계획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및 성과관리 실효성

1

2025년 성과평가 결과의 2027년도 예산서 반영 및 환류

정부는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개별 사업에 성인지 예·결산 성과평가 결과 반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계획·성과·환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반영사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는 성인지 예·결산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서 반영 여부와 후속조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2025년 성과평가 대상 250개 사업을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수록된 사업과 연결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기재 여부와 구체적인 반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분할·통합, 소관 변경 및 세부·내역사업 개편 등을 고려하여 동일·연속 사업을 확인하였으며, 하나의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2027년도 사업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연결관계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 대상 250개 사업 중 2027년도 동일·연속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사업은 230개였다. 이 가운데 228개는 2027년도 사업과 일대일로 대응되었으나, ‘지역디지털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이 각각 4개의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상세 연결관계는 총 236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7년도 동일·연속 사업을 확인하지 못한 평가사업 20개를 포함하였으므로 전체 상세 분석단위는 256개이다.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된 반영 내용을 성과지표·측정체계 개선, 성과목표 조정, 성별수혜·통계 정비, 사업 설계·운영 개선, 예산·집행 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반영의 실질적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예산서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반영수준을 ‘변경·실행 반영’, ‘조치계획 기재’, ‘검토·노력 예정’, ‘현황·사유 설명’, ‘조치내용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가. 성과평가 결과의 기재 현황

2025년 성과평가 대상 250개 사업 중 222개 사업(88.8%)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반영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별도로 6개 사업은 ‘반영사항 없음’, 1개 사업¹⁾은 ‘지적사항 없음’, 1개 사업²⁾은 ‘개선의견 없음’으로 작성되었다. 나머지 20개 사업(8.0%)은 2027년도 문서에서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사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성과평가 결과 기재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업 수	비중
반영내용 기재	222	88.8
반영사항 없음	6	2.4
지적사항 없음	1	0.4
개선의견 없음	1	0.4
2027년도 대상사업 연결 불가	20	8.0
합계	250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동일·연속 사업이 확인된 236개 상세 사업 중 184개(78.0%) 사업은 계획·성과·환류의 세 항목을 모두 작성하였다. 이외에는 계획만 작성한 사업 10개, 성과만 작성한 사업 3개, 환류만 작성한 사업 14개, 계획·환류 9개, 계획·성과 5개, 성과·환류 3개로 확인되었다.

동일·연속 사업을 확인하지 못한 20개 사업은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사업 종료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소관 변경, 세부사업·내역사업 개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개 사업의 평가등급은 보통 13개, 우수 6개, 미흡 1개이다. 미흡 사업은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1개뿐이므로, 확인 불가를 낮은 평가등급에 따른 사업 종료로 해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평가결과가 후속 사업에 어떻게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나. 성과평가 결과의 주요 반영내용

2027년도 사업과 연결된 236개 상세 연결관계의 주된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측정체계 개선’이 71개(30.1%)로 가장 많았고, ‘성과목표 조정’이 60개(25.4%)로 그다음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131개로 전체 연결관계의 55.5%를 차지하였다.

[성과평가 결과의 주요 반영내용]

(단위: 개, %)

주된 반영 내용	연결 사업 수	비중
성과지표·측정체계 개선	71	30.1
성과목표 조정	60	25.4
사업설계·운영 개선	43	18.2
성별수혜·통계 정비	24	10.2
예산·집행 관리	17	7.2
현행 유지·개선 검토·사유 기재 등	13	5.5
조치내용 없음	8	3.4
합계	236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과지표·측정체계 개선’에는 기존 성과지표 변경, 새로운 지표의 도입·검토, 측정산식 보완 및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일부 사업은 단순 여성 참여율에서 벗어나 성별 참여현황을 함께 관리하거나 사업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과목표 조정’에는 최근 실적을 반영한 목표치 상향, 반복 초과 달성에 따른 도전적 목표 설정 및 사업·예산 여건을 고려한 목표 산정근거의 보완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성과평가에서 제기된 소극적인 목표 설정 문제를 차년도 성과관리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설계·운영 개선’은 43개(18.2%), ‘성별수혜·통계 정비’는 24개(10.2%), ‘예산·집행 관리’는 17개(7.2%)였다. 성과평가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고 있으나, 성별 수혜구조와 성평등 성과를 실제 예산배분에 연결하거나 사업의 지원방식·전달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단계까지 이어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반영수준과 실질적인 환류 여부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환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36개 상세 연결관계의 반영수준을 살펴보면, 성과지표·성과목표 또는 사업운영 등의 변경이나 실제 실행 사실이 예산서에 기재된 경우는 73개(30.9%)였다. 구체적인 조치대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142개(60.2%)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검토·노력 예정 5개(2.1%), 현황·사유 설명 8개(3.4%), 조치내용 없음 8개(3.4%)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수준]

(단위: 개, %)

반영수준	연결 사업 수	비중
변경·실행 반영	73	30.9
조치계획 기재	142	60.2
검토·노력 예정	5	2.1
현황·사유 설명	8	3.4
조치내용 없음	8	3.4
합계	236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변경·실행 반영과 조치계획 기재를 합하면 215개로 전체 상세 연결관계의 91.1%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서상 변경 또는 실행 사실이 기재된 경우는 73개에 불과하며, 142개는 향후 조치계획에 해당한다. 또한 변경·실행 사실의 기재만으로 실제 조치의 이행과 성평등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실질적인 환류가 이루어진 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관리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사용기관 수’를 ‘취약계층 지원인원 수’로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 중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내역사업은 모집·선발 단계부터 성별자료를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결과를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윤리 교육’ 사업은 2026년부터 만족도 조사에 성별 문항을 추가하고 결과를 차년도 교육 운영과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를 시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의 ‘다기능기술자’ 내역사업³⁾**은 여성 취업률 등 결과지표 도입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은 목표 설정, 채용형 맞춤형과 취업관리 운영, 급식비 인상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환류계획이 기재되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를 기재하였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어린이집 평가 운영’**은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예산편성과 성과목표의 불일치 문제를 다시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처의 조치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의 ‘인재선발양성지원’**도 성과평가 총평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문서에 명시하였다. **성평등가족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연속성과 가족센터 이용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가족센터 이용자 수’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는 서비스 제공 규모와 접근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반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 또는 성별 참여·성과의 차이를 직접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평가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계기로 사업의 성평등 목표, 성과지표, 자료수집 방식 또는 사업운영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조치계획을 제시한 사업은 이후의 결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그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임

가. 반복 지적사업의 현황

성인지 예·결산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이후 성인지 예산서에 충실하게 반영되는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동일한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 심사 및 분석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개년 성인지 예·결산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동일 사업이 서로 다른 예산서 또는 결산서 분석에서 3회 이상 지적된 경우를 '반복 지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하나의 문서에서 동일 사업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경우에는 이를 1회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23개 사업이 반복 지적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2027년도 수록 여부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적 횟수
수록 (12)	외교부	글로벌연수(ODA) ^{주)}		7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융합서비스 글로벌마케팅 강화	4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성평등 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건 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3
		자활사업	자활근로	
	성평등 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2027년도 수록 여부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적 횟수
미수록 (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8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예술계 인력양성(ODA)		4
		게임산업 육성	게임인재원 운영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3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구 활용창업지원)		
	경찰청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보건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전공의 등 육성지원	
	교육부	인문사회기초연구(R&D)	학문후속세대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평등 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내일이룸학교	

주: 2027년에는 종전 '글로벌연수(ODA)' 사업이 '글로벌연수(ODA)'와 '미래인재양성(ODA)'로 분류
되어 전자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반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성인지 예·결산 분석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가운데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동일·연속 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12개였다. 이들 사업의 과거 지적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의 핵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3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은 5개, 뚜렷한 개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4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사업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동일하거나 연속된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 여부 확인에서 제외하였다.

나. 반복 지적에도 핵심문제가 지속되는 사례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기존의 핵심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문제는 크게 성별 또는 성평등 성과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

우, 참여인원·지원건수·만족도와 같은 산출·만족도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지속되는 경우, 성과목표의 도전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가 불충분하여 성평등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사업은 여성 범죄피해자를 성평등 목표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성별 구분이 없는 ‘스마일센터 종합지원 건수’이다. 해당 지표는 2025년 실적 8만 7,917건, 2026년 추정치 8만 8,796건, 2027년 목표치 8만 9,68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가 여성 범죄피해자의 회복이나 자립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기업 모집단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그대로 두면서 여성기업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 목표는 2025년 6개, 2026년 5개, 2027년 4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기업 지원 건수만으로는 해외진출 기회에 있어 성별 격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에 관한 반복 지적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거 지적연도	주요 지적사항
법무부	범죄피해자 치료및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예산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성별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여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여성폭력 근절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명확하므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결산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예산서) 2023년도 2025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결산서) 2023년도 2024년도	

둘째,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의 산출량이나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성과지표를 ‘사용기관 수’에서 ‘취약계층 지원인원 수’로 변경했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성과평가의 환류가 확인되지만, 교육 이수 이후 자격취득·취업·직무역량 향상 등 사업의 최종 성과까지는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단년도 관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지표 변경으로 반영된 사례이지만, 반복 지적의 관점에서는 결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2027년 목표를 86.2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만족도만으로는 사업이 여성 예술인의 경력단절 방지와 창작활동 지속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남성 참여자와의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부사업별로 창작활동의 지속률, 경력 복귀율, 돌봄 부담 완화 정도 등의 결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여성 강사 비율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다. 이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인식 개선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아 성별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여성 수혜자 비율이 약 85.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사업은 종전의 기여금 집행률을 유엔여성기구와의 협력 건수로 변경하여 협력활동의 성과를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하였다. 다만 회의·행사 참여, 지원·후원 및 업무협약 체결 등 성격이 다른 활동을 동일한 건수로 집계하고 있어 협력의 진전 수준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자기구 기여금 사업의 특성과 성과 귀속의 한계를 고려하되,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단계별 이행실적이나 협력 결과 등을 보조적으로 관리하여 협력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산출량·만족도 중심의 성과관리에 관한 반복 지적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거 지적연도	주요 지적사항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서) 2025년도 2026년도	교육 이수 후 취업·자격취득 등 사업의 최종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마련 필요
		(결산서) 2025년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서) 2022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참여자 만족도는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아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결산서) 2022년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서) 2025년도 2026년도	특정 성별의 수혜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성평등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별 격차와 사업 효과를 고려한 성과 지표 개발 필요
		(결산서) 2021년도 2023년도	
성평등 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예산서) 2025년도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기여금 집행률만으로 성평등 증진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결산서) 2023년도 2024년도	

셋째, 성과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성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금연상담전화’ 내역사업은 여성 등록자 비율이 2025년 15.9%에서 2026년 15.0%로 낮아졌음에도 2027년 목표를 다시 15.0%로 설정하였다. 여성 수혜자 비율 역시 2024년 16.3%에서 2026년 15.0%로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는 기존 지적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내역사업인 ‘자활근로’ 사업은 여성 참여자 비율 대신 여성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변경하였으나, 2027년 목표인 3만명은 2025년 실적 3만 138명과 2026년 추정치 3만 6,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참여 인원만으로는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인 취·창업, 탈수급, 고용 유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 자활 성공률 또는 취업 유지율과 같은 결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의 ‘글로벌연수(ODA)’ 사업은 여성 참여율 목표를 45.0%로 상향하였다는 점에서는 개선이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 연수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만 관리하고 있어 국가·분야별 여성의 접근성 차이와 연수 이후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성과목표의 도전성 및 성별 성과 측정에 관한 반복 지적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거 지적연도	주요 지적사항
보건 복지부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예산서) 2022년도	사업대상자의 성별 구성과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여성 등록자 비율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완할 필요
		(결산서) 2022년도 2023년도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예산서) 2023년도 2024년도 2026년도	여성 참여율의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하고, 취·창업을 통한 자립·자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별 자활성공률 등 결과지표 마련 필요
외교부	글로벌연수 (ODA)	(예산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여성 연수생 추천·할당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성과분석, 교육·직업훈련 분야별 여성의 접근성 측정 및 여성 참여율 목표치 상향 필요
		(결산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와 같이 반복 지적 사업을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지표의 명칭이나 목표치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제기되었던 성과관리의 핵심 문제가 반드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지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보다 해당 변화가 사업이 해결하려는 성별 격차와 정책적 장벽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반복 지적사항 내용이 반영된 사업

반복 지적사항의 핵심이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및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성 전임교원 비율뿐 아니라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을 성과관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7년도에는 여성 전임교원 및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 관련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목표치를 20.6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여성 교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대학 내 의사결정 참여까지 성과관리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과거 지적사항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중심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이용 정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7년도에는 지원 대상자 중 실제 이용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이용률 지표로 변경하고, 전산시스템에 따른 이용 실적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행정적 신청 또는 자격 부여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성과관리의 초점을 이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지원금 생성 이후 미사용 규모 및 사유까지 함께 분석할 경우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은 교육 대상자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교육 참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7년도에는 여성과 남성의 교육 수혜율 목표를 각각 20.3%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전년대비 일정 수준의 목표 상향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분석에서 제시된 성별 참여목표 설정과 목표치 상향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 반복 지적사항이 반영된 사업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거 지적연도	주요 지적사항
교육부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예산서) 202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수준 및 여성 대표성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교수 지위별·대학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반복적인 성과목표 초과 달성을 고려한 목표치 상향 필요
		(결산서) 2021년도 2023년도	
성평등 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서) 202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신청률 제고 및 성과목표 상향 필요 - 신청률과 예산 집행실적만으로는 실제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용률·사용률 등 실질적인 수혜 실적을 반영한 성과관리 필요
		(결산서)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예산서) 2025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교육 참여인원 감소에 대응한 교육방식 다양화 필요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남녀 교육수혜율에 차등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일한 목표치 설정 필요
		(결산서) 2021년도 2022년도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사항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 것은 성과평가와 차년도 예산편성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년도 성과평가 결과와 반복 지적 사업의 장기적인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본 결과, 평가결과를 문서에 기재하는 것과 사업의 성과관리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상세 연결관계 가운데 변경·실행 사실이 기재된 경우는 30.9%였으며, 반복 지적 사업 중 2027년도 계속사업이 확인된 12개 사업 가운데 과거 지적사항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3개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평가결과의 이행·승계 관리 강화

먼저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분할·통합, 세부·내역사업 개편이나 소관 부처 변경 이후에도 평가결과가 후속 사업에 어떻게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정보를 관리하고, 성과평가 반영사항도 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용, 조치시기 및 완료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경 완료’, ‘추진 중’, ‘향후 검토’를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 연도 결산 또는 성과평가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별 성평등 목표와 결과지표의 정합성 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성별 격차 또는 정책적 장벽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 참여자 수, 여성 수혜자 비율, 지원건수 또는 만족도는 사업의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 규모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사업이 실제 성별격차를 완화하거나 성평등을

증진하였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정책수단에 따라 취업·경력유지·자립·역량향상·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기대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목표치 역시 단순한 과거 실적의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중점 분석

가. 분석 목적 및 연계기준

2027년은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회계연도이므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평등 정책목표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2027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에는 제3차 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의 5대 정책과제와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요예산은 총 9조 5,527억원이다.

다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소요예산과 성인지 예산규모는 동일한 범위의 재정 규모로 보기 어렵다.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재정·비재정 과제를 포괄하는 반면, 성인지 예산은 그중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두 예산규모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된 274개 사업을 제3차 기본계획 및 2026년 시행계획과 대조하여 정책목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계유형은 사업의 동일·승계 여부와 정책적 관련성 및 실제 연계범위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접연계**는 성인지 예산 대상범위 전체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특정 과제를 직접 이행하고 동일·승계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간접연계**는 성인지 예산 대상범위 전체가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기여하지만 특정 시행계획 사업과의 동일·승계 관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부분연계**는 하나의 성인

지 예산사업 또는 내역사업 안에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비연계**는 사업목적·지원대상·정책수단을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의 정책·실행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여성 수혜자가 존재하거나 성별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의 취업·경력 개발, 성별 격차 개선, 돌봄 지원 등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수단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반대로 특정 시행계획 세부사업과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업목적과 정책수단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정책적 연계를 인정하였다.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과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목적과 재정지원 수단을 기준으로 대표과제 하나를 부여하였다. 또한 조직개편, 사업 이관, 명칭 변경 또는 세부·내역사업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동일·승계 여부를 확인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과 성인지 예산사업의 연계유형 판정절차]



나. 5대 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사업 연계 현황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274개를 제3차 기본계획 및 2026년 시행계획과 대조한 결과, 241개 사업(88.0%)이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직접·간접 또는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개 사업(12.0%)은 기본계획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계유형별로 보면 직접연계는 39개로 전체 사업의 14.2%, 간접연계는 165개로 60.2%, 부분연계는 37개로 13.5%였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상당수가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 사업과 동일하거나 이를 직접 승계하는 형태보다는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간접연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 5대 정책과제별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연계 현황]

(단위: 개)

정책과제	직접연계	간접연계	부분연계	합계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6	115	5	126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8	11	8	27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12	22	10	4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8	6	8	22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5	11	6	22
연계사업 합계	39	165	37	241
비연계	-	-	-	33
전체	-	-	-	274

주: 복수과제와 관련되는 사업은 주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수단을 기준으로 대표과제 1개에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책과제별로 보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126개 사업이 연계되어 전체 연계사업 241개의 52.3%를 차지하였다. 다만 이 가운데 직접연계는 6개에 그친 반면 간접연계가 11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연구지원 사업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경력개발과 관련되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특정 사업을 직접 이행하거나 승계하는 구조는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는 27개 사업이 연계되었으며, 직접연계 8개, 간접연계 11개, 부분연계 8개로 나타났다. 노동환경 분야에 비해 직접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이돌봄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과 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서비스 및 지원수단과 개별 재정사업의 대응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에는 44개 사업이 연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연계가 12개로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보호·상담·수사·법률지원이나 성인지적 건강정책은 정책대상과 사업수단이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비교적 명확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같이 성별 기반 폭력에 해당하는 지원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연계로 구분하였다.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에는 각각 22개 사업이 연계되었다. 이들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대표성 제고,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연계관계를 검토하였다.

기본계획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33개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직업교육·기업지원·시설운영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성의 취업·경력개발 또는 성별 격차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연계로 분류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 목적과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간 연계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다.

다. 연계상의 특징 및 중점분석 대상 도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지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계획과의 정책적 연계는 비교적 폭넓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재정사업과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는 제한적이다.

전체 274개 사업 중 241개인 88.0%가 직접·간접 또는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평등 정책목표와 동일한 정책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체 274개 사업 가운데 직접연계는 39개로 14.2%에 그친 반면, 간접·부분연계는 202개로 73.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높은 연계율을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 성인지 재정사업이 일대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당수 사업은 일반적인 고용·훈련·복지·교육사업이 기본계획의 성평등 정책목표에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관계에 가깝다.

특히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분야는 전체 연계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직접연계 사업은 6개로 해당 분야 연계사업의 4.8%에 불과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관련된 재정사업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들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성별 격차 개선목표를 직접 이행하는 재정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 중 어느 범위가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관련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중 부분연계로 분류된 사업은 37개이다. 이들 사업은 동일한 세부사업 안에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내역과 그렇지 않은 내역이 함께 포함되거나,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을 포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은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지원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은 여성인력의 취업영역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과정과 기본계획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부분연계로 구분하였다.

부분연계 사업 37개의 성인지 예산 대상금액 전체는 약 5,900억원이지만, 이를 모두 기본계획 관련 재정투입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내역의 예산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기본계획 관련 범위의 예산액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투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계획과의 연계사업 수를 파악하는 것과 정책목표별 재정투입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분연계 사업의 전체 예산액을 관련 정책과제의 재정투입액으로 합산하면 실제 연계범위를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과 예산액을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별 주요 재정사업을 식별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성인지 예산사업을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공통 과제코드나 이에 준하는 식별정보가 없어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및 정책수단을 사후적으로 대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내역이나 지원대상만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와 예산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정책목표별 재정투입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과제별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액을 명시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포함 여부와 미포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기본계획의 관련 정책과제와 연계유형을 표시하고, 부분연계 사업은 관련 내역과 예산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책목표별 재정투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계획과 재정사업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가 기본계획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성별 격차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성별임금격차 개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지원 및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유지,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분담, 고용형태와 임금 등 소득 격차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재정사업의 수행실적만으로 정책성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영역 가운데 일·돌봄·소득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별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재정사업의 정책수단과 성과지표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을 출발점으로 각 사업이 제3차 기본계획의 어느 정책과제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성인지 재정사업의 연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계획이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를 출발점으로, 해당 격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이 가운데 어떠한 재정사업이 성인지 예산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일·돌봄·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성별격차 → 정책목표 → 재정·비재정 정책수단 → 성인지 재정사업 → 성과지표의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주요 구조지표를 통하여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성별격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재정수단의 구성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재정배분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성인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가 기본계획이 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일·돌봄·소득의 구조적 성별격차 변화

(1) 돌봄의 성별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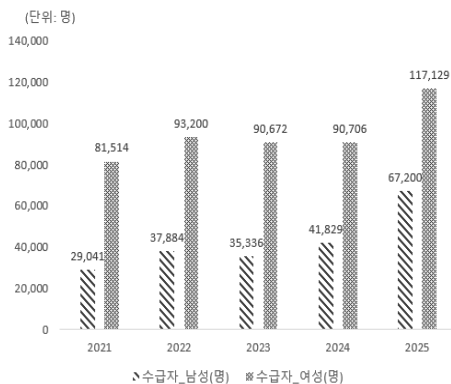
돌봄의 성별 분담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 이용의 성별격차와 실제 가구 내 돌봄시간의 성별격차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현황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수로 살펴보면, 남성 수급자는 2015년 4,872명에서 2025년 6만 7,2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 2,467명에서 11만 7,12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전체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6%에서 2025년 36.5%로 높아졌으며, 여성 수급자 수는 2015년 남성의 약 16.9배에서 2025년 약 1.7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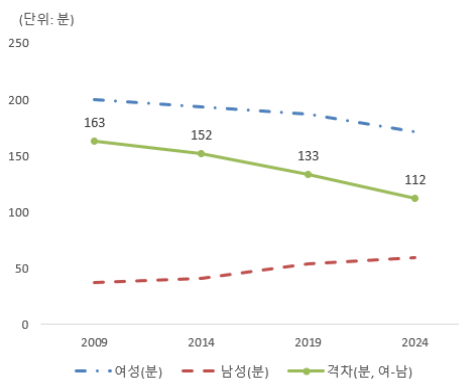
최근 5년간의 변화에서도 남성 수급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2020년 2만 7,421명에서 2025년 6만 7,200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8만 4,617명에서 11만 7,129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도 2020년 24.5%에서 2025년 36.5%로 상승하였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에서 남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2025년에도 여성 수급자가 남성보다 약 5만명 많아 육아휴직 이용의 성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성별 격차는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009년 200분에서 2014년 193분, 2019년 187분, 2024년 171분으로 감소한 반면, 남편은 같은 기간 37분에서 41분, 54분, 59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격차는 2009년 163분에서 2014년 152분, 2019년 133분, 2024년 112분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성별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4년에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약 2.9배에 달하여, 가사노동의 성별 분담 격차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격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주: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격차의 2009년은 '남편-주부', 2014년 이후는 '남편-아내' 구분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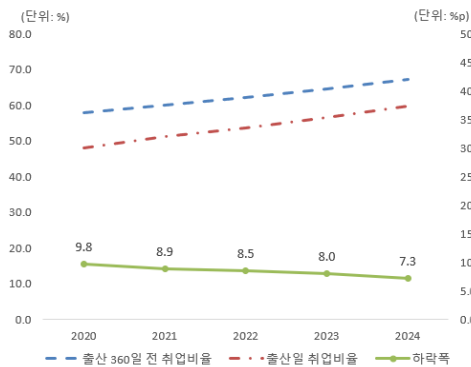
(2) 출산·육아기 고용의 지속성

출산·육아기에 나타나는 여성의 고용이탈은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출산 360일 전 취업비율과 출산일 취업비율의 차이’는 2015년 출생 코호트의 11.4%p에서 2024년 7.3%p로 축소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직전인 2022년에는 출산 360일 전 취업비율이 62.2%, 출산일 취업비율이 53.7%로 하락폭이 8.5%p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67.2%와 59.9%로 하락폭이 7.3%p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산 시점의 여성 고용이탈이 장기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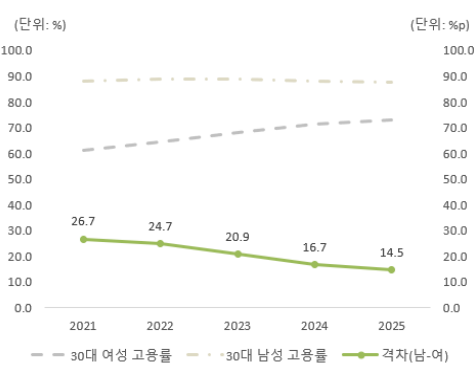
‘30대 고용률 격차’를 살펴보면, 30대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2015년 34.0%p에서 2019년 27.0%p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24.7%p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3년 20.9%p, 2024년 16.7%p, 2025년 14.5%p로 빠르게 낮아졌다. 특히 2022~2025년 30대 여성 고용률은 64.4%에서 73.1%로 8.7%p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89.1%에서 87.6%로 1.5%p 하락하여, 최근의 격차 축소는 대부분 여성 고용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비율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30대 성별 고용률 격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3) 일자리의 질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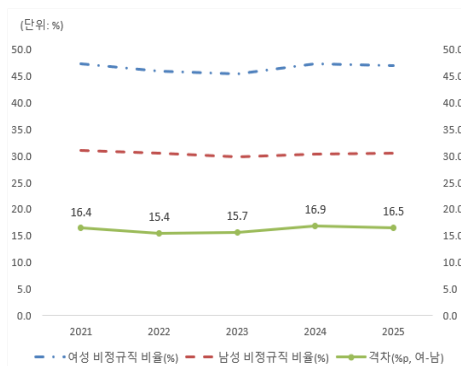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출산·육아기 고용 지속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용형태와 소득의 성별격차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제한적이다.

먼저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격차는 2015년 13.8%p, 2019년 15.6%p, 2021년 16.4%p였다.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직전인 2022년에는 15.4%p였으며, 이후 2023년 15.7%p, 2024년 16.9%p, 2025년 16.5%p로 나타났다. 2025년 격차는 2022년보다 1.1%p 크지만 2021년과는 0.1%p 차이에 불과하여, 격차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장기적으로는 축소되고 있으나 최근의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남성 월평균임금총액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는 2015년 40.5%에서 2025년 34.3%로 6.2%p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직전인 2022년 35.0%와 비교하면 2025년까지의 축소폭은 0.7%p에 그쳤다. 또한 2023년 34.7%, 2024년 35.2%, 2025년 34.3%로 최근에는 일관된 하락 추세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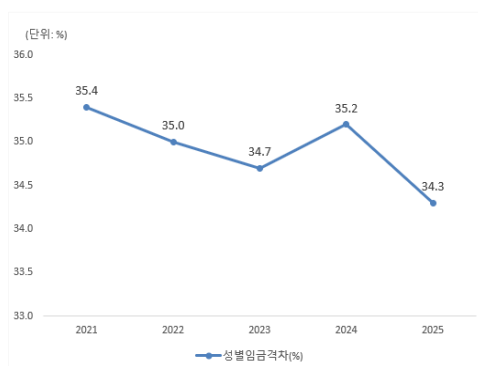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지속의 개선이 고용형태와 임금의 성별격차 개선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평등한 노동환경의 성과를 여성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취업 이후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성별 임금격차]



주: 성별임금격차 = (남성 월평균임금총액 - 여성 월평균임금총액) / 남성 월평균임금총액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나. 구조적 성별격차에 대한 정책·재정수단의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돌봄·소득 영역의 구조적 성별격차는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에 대응하여 정부가 어떠한 재정·비재정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재정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재정배분 변화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가운데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점사업 집계는 앞 절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전체 274개, 기본계획 연계사업 241개 및 노동환경 과제에 연계된 126개와는 대상범위가 다르다. 또한 제I장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예산배분 분석과 달리, 구조적 성별격차에 대응하는 3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분류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하의 ‘돌봄’은 중점사업을 정책수단별로 재분류한 영역이며, 기본계획 정책과제 가운데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27개 연계사업과 같은 집단을 뜻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는 중점사업을 앞에서 살펴본 구조지표 및 정책수단에 대응하여 ‘일’, ‘돌봄’, ‘일자리 질·소득’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다만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같이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와 여성의 고용 지속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된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하나의 영역에 분류하였으므로, 영역별 분류가 각 사업의 정책효과를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2027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9조 9,205억원으로, 2026년 9조 9,536억원 대비 331억원(0.3%)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점사업 수는 같은 기간 70개에서 66개로 4개 감소하였으나, 연도별 중점사업의 선정범위와 사업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성평등 관련 재정투자의 축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 영역의 예산은 2026년 5조 7,752억원에서 2027년 5조 5,148억원으로 2,604억원(4.5%) 감소한 반면, ‘돌봄’ 영역의 예산은 같은 기간 4조 1,762억원에서 4조 4,028억원으로 2,266억원(5.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중점사업 예산에서 ‘일’ 영역의 비중은 58.0%에서 55.6%로 2.4%p 하락한 반면, ‘돌봄’ 영역의 비중은 42.0%에서 44.4%로 2.4%p 상승하였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영역별 재정배분 변화]

(단위: 개, 억원, %)

연도	구분	사업수	예산	비중	‘26→’27 증감률
2026	일	65	57,752	58.0	
	돌봄	4	41,762	42.0	
	일자리 질·소득	1	22	0.0	
	합계	70	99,536	100.0	
2027	일	60	55,148	55.6	△4.5
	돌봄	4	44,028	44.4	5.4
	일자리 질·소득	2	29	0.0	31.8
	합계	66	99,205	100.0	△0.3

자료: 각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일자리 질·소득 영역에 직접 대응하는 중점사업의 예산은 2027년 29억원으로 전체 중점사업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이는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상 성차별은 직접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근로감독 등 공시·감독·규제 방식의 비재정수단 역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재정배분만으로 일·돌봄·소득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구조적 성별격차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 공시·감독 등 비재정수단이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재정사업도 돌봄부담 완화와 고용지속 등 복수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돌봄·소득의 구조적 성별격차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수단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돌봄 분야에서는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 확보, 외부 돌봄서비스 공급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고용지속과 관련해서는 경력이탈 예방부터 노동시장 재진입 및 경력개발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질과 소득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성별 고용·임금격차의 가시화와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는 공시·감독 등의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구조적 성별격차와 주요 정책·재정수단의 대응]

구조적 성별격차	주요 정책수단	대표적 재정·비재정 수단
돌봄의 성별 분담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 확보	모성보호육아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외부 돌봄서비스 공급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근로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의 지속성	경력이탈 예방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개발·직무전환	여성과학기술인 혁신 성장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일자리의 질·소득	성별격차 가시화·개선 유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경력유지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
	직무역량·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부모가 직접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지원, 외부 돌봄서비스의 공급,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환경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부모가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아이돌봄·초등돌봄·직장 및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등은 가구 외부에서 돌봄수요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은 일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돌봄 분야에는 시간지원, 서비스 공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포괄하는 복수의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앞서 구조지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성 육아 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2020년 2만 7,421명에서 2025년 6만 7,200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이용의 성별 불균형은 완화되고 있으나, 여성 수급자가 여전히 더 많고 맞벌이 가구의 가사·돌봄시간의 절대적인 성별격차도 큰 수준이다. 따라서 돌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 이용 확대가 실제 남성의 돌봄참여와 가구 내 돌봄분담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고용지속·재진입·경력개발 지원

여성의 고용지속과 관련된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경로에 따라 경력이탈 예방 → 노동시장 재진입 → 경력개발·직무전환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기에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이 첫 단계이고,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는 과학기술·디지털·산업 전환 등 분야별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탈 예방부터 재진입 및 경력개발까지 단계별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는 각 사업별 취업률이나 참여율, 경력유지율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개인이 출산·육아기에 고용을 유지하였는지, 경력이탈 이후 재진입하였는지, 재진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경력경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수단의 구성뿐 아니라 단계별 지원이 실제 장기적인 고용지속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도 함께 필요하다.

(4) 고용형태 및 소득격차에 대한 대응

일자리 질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책대응은 돌봄이나 고용지속 분야와 다소 다른 구조를 보인다.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상 성차별은 특정 재정사업을 통해 직접 해소하기보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파악·공개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공시·감독·제도개선 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근로감독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모성보호와 고용안정 정책 역시 경력단절과 근속기간의 성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임금 및 일자리 질의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취업 여부만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 전후 고용지속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의 성별격차는 개선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취업 및 훈련 참여 이후의 고용형태, 고용지속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의 질과 소득 분야에서는 재정사업과 구조적 성별격차 사이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며, 재정지원과 공시·감독·규제 등 비재정수단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영역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특정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이 성별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변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구조적 성별격차와 성인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1) 사업 성과지표와 구조적 성별격차 간의 간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돌봄·소득 영역에는 여러 형태의 정책·재정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존재나 개별 사업의 목표 달성만으로 구조적 성별격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 사업은 참여자 수나 여성 수혜율과 같은 산출지표에서 벗어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제3차 기본계획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와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 사이에는 여전히 측정단위와 측정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가구 내 남성의 돌봄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까지 개별 사업지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급자 수만으로 실제 휴직기간과 사용시기, 휴직기간 중 돌봄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라는 제도 이용 지표와 실제 가구 내 돌봄분담이라는 구조적 결과 사이에는 측정상의 간극이 존재한다.

고용 분야에서도 사업별 고용유지율이나 여성 취업률을 각각 확인할 수 있으나, 한 개인의 노동시장 경로를 기준으로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이탈하였다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는지, 재진입 이후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존 정책수단이 경력이탈 예방-재진입-경력개발의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성과관리는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과 소득에서는 이러한 간극이 더욱 크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 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 여부와 취업 여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취업 이후 정규직 여부, 고용지속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사업의 성과지표와 구조적 성별격차]

영역	주요 사업 성과지표 예시	확인 가능한 결과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
돌봄의 성별 분담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집행률 및 만족도	보육서비스 운영·이용 만족	실제 부·모 돌봄시간 및 가구 내 분담 변화
고용의 지속성	여성과학기술인 혁신 성장 지원: 여성과학 기술인 경력유지율	사업 참여 여성과학기술 인의 경력유지	출산 전후 이탈→재 진입→장기 고용유지 의 전체 경로
일자리의 질·소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AA 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 수준	여성의 관리자 진입, 임금·고용형태 등 일자 리의 질적 격차 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여러 정책과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성별격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별 사업성과와 구조적 결과 사이의 중간 성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개별 사업의 성과가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정책목표 단위 성과관리 한계

이러한 한계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관리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과제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성과관리는 공통된 정책성과를 기준으로 사업군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예를 들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는 ICT 분야 대학생의 현장 진입을 지원하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최고급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차세대보안리더(BoB), 산업전환 과정의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문화예술 분야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등 정책대상과 지원방식이 서로 다른 사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각기 측정하는 성과도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단순히 합산하여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전체의 성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앞서 살펴본 구조지표는 같은 정책영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출산 전후 여성의 고용 지속 지표는 개선되는 반면, 실제 가구 내 돌봄분담의 성별 불균형은 여전히 크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의 성별격차 개선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66개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각 사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정책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개별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일·돌봄·소득과 관련된 구조적 성별격차는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 영역의 경우, 출산 전후 여성의 고용 지속은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30대 성별 고용률의 차이 역시

감소하고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2015년 4,872명에서 2025년 6만 7,2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도 5.6%에서 36.5%로 높아졌다. 다만 2025년 여성 수급자는 11만 7,129명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많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 격차는 여성의 시간 감소와 남성의 시간 증가가 함께 기여하여 축소되었으나, 절대적인 성별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다. ‘일자리의 질·소득’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격차 역시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도 2022년 이후 개선폭이 제한적이다.

정책·재정수단의 구성에서도 영역별 차이가 확인된다. 돌봄과 고용 지속의 경우 직접 돌봄시간 확보, 외부 돌봄서비스 공급, 근로환경 개선, 경력이탈 예방 및 재진입·경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이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재정구조에서도 돌봄 관련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자리의 질과 소득 영역에서 직접적인 재정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공시·감독·규제 등 비재정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개별 성인지 재정사업의 성과와 기본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 사이의 연결관계를 현재의 성과관리체계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사업에서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돌봄분담, 출산·육아기 전체의 고용경로, 취업 이후의 고용형태와 임금 등 구조적 결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개별 사업지표만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역시 개별 사업별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통된 정책목표 수준에서 사업군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과 성인지 재정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계획 관련 사업의 수나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성별격차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개별 재정사업의 연계관계를 문서상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성인지 예산사업만으로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전체 재정·비재정 정책수단을 포괄할 수는 없다. 또한 일·돌봄·소득 분야의 구조적 성별격차와 성인지 재정사업을 함께 살펴본 결과,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와 기본계획이 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 사이에는 측정단위와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4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관리제도를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사업의 선정·설계·예산편성·성과관리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목표와 재정사업의 연계관계를 명확히 하고, 둘째,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관리에서 정책목표 중심의 중기 성과관리로 발전시키며, 셋째, 성별 수혜배분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와 구조적 성별격차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개선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재정수단의 구성 자체를 점검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정책목표와 재정사업의 연계 강화

(1)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주요 재정사업의 연계

제3차 기본계획은 5대 정책과제와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재정사업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계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분석에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각각 대조하여 관련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성인지 예산과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선정목적과 대상범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정책목표의 사업을 포괄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주요 재정사업을 먼저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그 가운데 성인지 재정운용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업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영역별로 재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핵심 사업군을 함께 제시하고,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연도별 시행계획-재정사업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과제코드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정보를 활용한다면 사업명 변경, 세부·내역사업 개편 또는 소관 부처 변경 이후에도 정책목표와 재정사업의 연속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정보에는 대표과제와 보조연계, 직접·간접·부분연계 유형 및 부분연계의 구체적인 범위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부분연계 사업은 분류사업 전체액과 확인 범위 금액을 구분하고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범위도 명시하여, 정책목표별 재정투입을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군에 기여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군을 정하고 보조관계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업 수, 예산 및 수혜자의 중복 합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정책수단의 구성과 그중 성인지 재정운용을 통해 중점관리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실제 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전 성별영향 검토를 사업설계·예산편성에 연계

정책목표와 재정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성별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사업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시점과 예산요구·편성 시점에도 차이가 있어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설계와 예산규모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문서상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서식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추가하기보다는 신규사업, 대규모 사업, 사업구조가 크게 변경되는 사업 및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등에 대하여 기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분석항목을 예산요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어떠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지, 직접·간접적인 정책대상은 누구인지, 사업 이용 과정에 어떠한 접근장벽이 있는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지원대상·지원조건·전달방식 또는 예산배분이 실제로 조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 성별영향 검토항목 예시]

검토항목	주요 내용
정책문제·목표집단	사업이 해결하려는 성별 격차와 주요 정책대상
직접·간접 수혜	직접 지원을 받는 집단과 사업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
예상 수혜·부담의 분포	성별·소득계층·연령대별로 예상되는 상대적인 수혜 또는 부담의 방향
추가 고려집단	장애, 가족형태, 지역, 고용형태 등 사업 특성상 추가적으로 고려할 집단
접근장벽	신청요건, 시간·공간, 정보접근, 비용 등 사업 이용의 제약 요인
설계 반영사항	사전분석을 토대로 조정한 지원대상·지원조건·전달방식·예산배분
결과지표	사업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성평등 관련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캐나다의 2024년도 예산에서 활용된 ‘GBA Plus’는 이러한 사전 검토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캐나다 정부는 주요 예산조치에 대하여 성별뿐 아니라 소득·연령 및 추가적으로 고려할 집단의 특성, 사업 이용상의 접근장벽 등을 함께 제시하고, 예산조치 건수의 70% 이상에서 정책개발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 GBA Plus를 완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¹⁾

다만 우리나라에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점수화하여 도입할 필요는 없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이나 신규·대규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

1)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udget 2024: Statement and Impacts Report on Gender, Diversity, and Inclusion」, 27쪽, 2024. 4. (‘Timing of GBA Plus’, Chart 1)

지 예산의 분석내용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별 외에 소득·연령 등 주요 정책대상의 예상 수혜방향과 접근장벽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사업설계와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성별 영향 분석의 목적도 특정 사업을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는 데 있기보다, 사업설계 전에 성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와 그 결과가 실제 정책 및 예산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

나. 정책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고도화

(1)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와 사업군의 중기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구조적 결과 구분

2027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참여인원이나 여성 수혜율에서 벗어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결과에 가까운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결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특정 사업의 성과 개선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수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성별격차의 개선과 곧바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여성인력 지원 사업의 경력유지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이를 전체 30대 성별 고용률 격차나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에 직접 귀속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 성별격차는 해당 사업뿐 아니라 다른 재정사업, 법·제도, 노동시장 여건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사업군의 중기성과-정책목표 수준의 구조적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은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참여, 서비스 제공, 취업, 고용유지 등의 결과를 관리하고, 사업군은 동일한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여러 사업을 묶어 참여자의 중기적인 변화를 점검하며, 기본계획에서는 여러 사업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구조적 성별격차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별 사업-사업군-정책목표의 3층 성과관리 체계 예시]

영역	연간 사업지표	중기 정책결과	정책목표 구조지표
돌봄의 성별 분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근로시간 단축 이용 돌봄서비스 이용자	남성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맞벌이 가사·돌봄시간 격차
고용의 지속성	취업률 지원 후 6개월·12개월 고용유지율	출산 전후 지원사업 이용자의 1·3년 후 고용유지율	출산 전후 취업비율 하락폭 30대 고용률 성별 격차
일자리의 질·소득	직업훈련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취업 후 고용형태 임금수준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성별 격차 성별 임금격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때 기본계획의 구조지표는 개별 사업이나 사업군의 성과로 직접 귀속하기보다, 해당 사업군의 성과가 정책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해석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구조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감안하면서도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와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수준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정책목표별 사업군 단위의 중기성과 관리

앞에서 제시한 3층 성과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여러 재정사업을 정책문제와 정책수단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사업군화하고,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와 별도로 사업군 차원의 중기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은 각각의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지표를 활용하므로, 개별 목표달성률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군 관리방식은 이번 분석에서 살펴본 제3차 기본계획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통해 예시할 수 있다. 현행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관련 중점사업은 정책문제와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① 경력이탈 예방, ② 노동시장 재진입, ③ 미래일자리 진입·직무전환, ④ 근로시간·일·생활 균형, ⑤ 고용구조·

임금격차 개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한 사업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관리할 정책영역이 정해진 이후에는 개별 사업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계에 따라 사업군화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군별 성과관리는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를 하나의 공통지표로 획일화하는 방식보다는, 각 사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연간 성과와 사업군이 공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기 결과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취업지원사업은 참여자 수나 취업률을 관리하더라도,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군 차원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의 고용유지, 고용형태 또는 소득 변화 등 보다 중기적인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 사업의 연간 성과-사업군의 중기성과-정책목표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점검하면, 개별 사업의 목표달성률만으로 정책목표 전체의 성과를 판단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 성별격차는 재정사업뿐 아니라 법·제도, 노동시장 및 인구·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지표의 변화를 특정 사업군의 성과로 직접 귀속하기보다 사업군의 성과가 정책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군의 중기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계 가능한 행정자료나 참여자 추적조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가족형태·고용형태 등 정책대상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되, 자료연계 가능 여부, 추적기간 및 표본의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찰된 변화가 해당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지원의 영향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군별 중기성과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중점사업의 선정·재선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방안은 중점사업 운영체계와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성별 수혜분석에서 구조적 변화까지 분석범위 확장

(1) 성별 수혜분석에서 생애경로의 변화로 확대

성인지 예산에서 성별 수혜분석은 특정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실제로 수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분석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수혜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성별 수혜격차가 축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성평등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별 수혜분석을 사업 접근성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 단계의 지표로 활용하되, 그 이후 실제 삶의 변화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돌봄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 부모의 실제 돌봄시간과 고용지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사업도 여성 취업자 수를 넘어 취업 이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생활 균형 지원 역시 지원 사업장의 수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제로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하였는지, 제도 이용이 돌봄시간 및 경력유지와 연결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성별 수혜분석을 폐지하거나 다른 분석으로 대체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대상자와 실제 수혜자의 성별 구성은 정책 접근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본적인 중간지표로 유지하되, 사업 참여 이후 나타난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재정운용의 성과분석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2) 성별격차와 인구·경제구조의 상호관계까지 확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일·돌봄·소득의 성별격차를 서로 분리된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상호 연계된 구조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구 내 돌봄부담의 성별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 및 경력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고용형태와 임금 및 생애소득의 격차와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저출생·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도 돌봄수요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부담을 변화시키고, 이는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 돌봄 관련 재정수요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성인지 재정운용은 돌봄, 고용, 소득 및 가족형성 등 생

에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성별 차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재정수단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지 재정운용은 특정한 ‘여성 관련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라기보다, 일반 재정사업을 포함한 정부정책이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구조적 성별격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인구정책 등으로 분석 범위를 넓히되, 분석의 중심에는 여전히 구조적 성별격차 해소라는 성평등 정책목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선정 및 운영체계 보완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가운데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도 현행 중점사업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일·돌봄·소득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별격차의 변화와 정책·재정수단 및 성과관리의 연계관계를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분석대상의 설정이 일·돌봄·소득 분야를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성평등 추진 중점분야는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당시의 성별격차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특정 분야를 사전에 고정하기보다, 구조적 성별격차의 수준과 변화 → 해당 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 주요 정책수단과 재정사업의 구성 → 성인지 재정운용을 통한 중점관리 필요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분야와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구조적 성별격차를 고려한 중점분야 선정

성평등 추진 중점분야는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가운데 재정규모가 크거나 성인지 예산사업이 많이 포함된 분야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기보다, 해당 분야의 구조적 성별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 격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서도 일·돌봄·소득 관련 지표의 변화는 동일하지 않았다. 일부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반면 실제 돌봄분담과 고용형태·소득 관련 격차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영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사업 수나 예산규모보다 구조적 성별격차의 크기, 지속성 및 개선 정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및 분야별 공식통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별격차의 수준과 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 추진 중점분야 선정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진 영역과 격차가 지속·확대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정책 환경이나 성별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기본계획 기간 중에도 중점관리의 우선순위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고려한 중점사업 구성

중점분야가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성인지 예산사업을 일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기보다,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수단을 먼저 파악하고 그중 재정사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높은 핵심 사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의 구조적 성별격차에 대해서도 여러 정책수단이 함께 작동한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뿐 아니라 법·제도, 공시·감독 등 비재정수단이 중요한 분야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점사업의 수나 예산액을 확대하는 것 자체보다, 해당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재정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점분야별로 **정책문제-정책목표-주요 정책수단-핵심 재정사업**의 관계를 정리하고, 동일한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중점사업을 사업군 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책목표를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핵심사업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연계사업을 구분하고, 하나의 사업 중 일부 내역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정책적으로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중점사업의 선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과점검을 통한 중점사업의 주기적 재선정 및 환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한번 선정한 사업을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기보다, 정책환경과 구조적 성별격차의 변화 및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사업의 연간 목표 달성 여부만으로는 중점사업이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와 함께 해당 사업군이 개선하려는 중기적인 정책성과와 구조적 성별격차를 사전에 설정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과정에서 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별 사업-사업군-정책목표의 성과관리 위계를 중점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구조적 격차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거나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중점사업에서 조정하고, 반대로 격차가 지속·확대되거나 새로운 정책수요가 나타난 영역은 신규 중점사업으로 편입하는 등 중점사업의 구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과 성과지표 설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기본계획 중간평가와 종료평가에서는 중점사업의 재정투입과 사업군의 성과 및 구조적 성별격차의 변화를 함께 점검하여 차기 기본계획의 중점분야 선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제4차 기본계획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특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목록이라기보다, **당시의 구조적 성별격차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수단 가운데 핵심 재정사업을 사업군으로 구성한 뒤, 성과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점사업이 단순한 성인지 예산사업의 일부 목록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의 주요 성평등 정책목표와 재정운용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부처별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12개 부처의 17개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①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경우(2개 사업),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6개 사업), ③ 성과목표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4개 사업), ④ 성과지표 산출 근거가 필요한 경우(1개 사업), ⑤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1개 사업), ⑥ 성별 수혜분석이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2개 사업), ⑦ 사업 구조 및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1개 사업)를 확인하였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검토 내용(17건)]

지적사항 분류	지적 내용	검토 건수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거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재검토 필요	2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함	6건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기존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할 필요	4건
성과지표 산출 근거 필요	성과지표의 측정단위 및 목표치 산출 근거를 명 확히 제시할 필요	1건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적절 한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으로 재분류 필요	1건
성별 수혜분석 부적절 및 보완 필요	사업대상자·수혜자 및 성별 예산현황의 적절성과 정확성 제고 필요	2건
사업 구조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사업목적과 지원방식이 상이한 사업을 구분하여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1건

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본 보고서에서는 2개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실제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사업 실시 과정에서 성별 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사업이 확인되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사유
1	국토 교통부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공간정보융합 핵심인재양성)	공간정보 융복합 특 성화대학원 석·박사 장학생 선발·지원	장학생 선발 과정에 성별 고려 요소 가 없고 성평등 목표와 실제 사업 운영방식 간 연계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 및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으로서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2	보건 복지부	해산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 지원	지급요건 및 수준이 수급자격에 따 라 결정되고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 성이 불명확하며, 현행 성과지표도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 하지 못함

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관련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본 보고서에서는 6개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한 결과, ① 사업 참여자 수나 위원회 활동 횟수 등 단순 실적만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대상자의 성별 구성과 성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별의 참여율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③ 성별 구성의 외형적 균형만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성별 편향 완화 등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④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성별 선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실제 사업성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개선 필요사항
1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수(명)	참여자 수만으로 경제적 자립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성별 자활성공률과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등 보완 필요
2	행정 안전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 도민 지원 사업 관련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 도민 지원 사업 관련 여성 참가율(%)	여성의 참여·수혜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단순 여성 참가 율보다 경제활동 및 사회정착 과정의 성별 격차 개선을 측정 하는 지표 필요
3	행정 안전부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 분야 여성전 문인력 교육 참여율 (%)	여성 참여율 자체보다 교육기 회 및 전문인력 양성에서 성별 격차가 개선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필요
4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실적(회)	위원회 개최 횟수 외에 자문·권 고사항의 정책 반영률, 개선과 제 이행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마련 필요
5	문화체육 관광부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 시 발화자 성별 구성 비율 차(%)	발화자 수의 성별 구성 차이만 으로는 말뭉치 내용에 포함된 성별 고정관념이나 표현상의 편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언어자료의 실질적인 성별 편 향 완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6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 그램 성별 선발 비율 (%)	성별 선발 비율은 지원자의 관 심도·어학성적 등 사업 운영 과 정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외 현장학습을 통한 경력·진로 설 계 및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 과지표 마련 필요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준의 적절성

본 보고서에서는 4개 성인지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최근 실적이나 사업 추진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27년도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5 실적	'26 추정치	'27 목표치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1	중소 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R&D)	여성기업인 수혜 비율(%)	11.7	11.8	10.0	'사업 규모 감소율'을 수혜비율 목표에 적용 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필요
2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반)	여성 참여자의 취업률(%)	54.2	51.3	51.3	2025년 실적보다 낮고 2026년 추정치와 동일 한 목표를 설정하여도 전성 부족
3	고용 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여성참 여비율(%)	39.5	39.0	37.5	최근 여성참여비율 증 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 표를 설정하여 상향 조 정 필요
4	법무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87,917	88,796	89,684	최근 3개년도 목표 초 과달성 실적 등을 고려 하여 보다 도전적인 목 표 설정을 검토하고, 심 리·법률 주거·사회지원 영역별 상별 수혜현황 의 관리 강화 필요

(3) 성과지표 산출 근거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1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성과지표의 측정단위와 목표치 설정에 활용한 통계의 측정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과지표 산출 근거 수록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산출 근거 개선 필요사항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R&D) (핵심연구 유형B 최초신규)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 성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	여성 연구자 구성비를 참고하여 여 성 선정연구비 비율의 목표치를 설 정하였으나, 과제별 연구비 규모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므로 보완 필요

다.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1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국가 성평등지 수 영역	분석의견
1	성평등 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 보수교육을 통 한 전문성 및 성인 지 감수성 제고	고용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고용격차 개선보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있 으므로 '양성평등의식' 영역으 로 변경 검토 필요

라. 성별 수혜분석의 적절성 및 정확성 제고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2개 성인지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실제 수혜범위나 재정지원 규모가 성별 수혜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정의 및 통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성별 수혜분석 개선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별 수혜분석 개선 필요 사항
1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율)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 년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을 지급하여 농업·농촌 정착 지원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혜 규모를 보완 제시하고 신규 2년차·3년차 등 지 원 연차별 성별 예산현황을 구분할 필요
2	성평등 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 정 양립 지원	사업대상자의 통계출처 정정 및 모집단 적정성 검토, 누적 유효 인증기업과 당해 연도 심사비 지원기업의 구분·관리, 남녀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적을 활용 한 성별 수혜분석 보완 필요

마. 사업 구조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본 보고서에서는 1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지원방식이 상이한 내역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개별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되었다.

[사업 구조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사업 현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의견
1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정책 전략기반구축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 대와 지급기를 비치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 운영 및 중앙관리시 스템 구축 등을 지원	세부사업 전체 예산의 약 97.6%를 차지하나 현행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로는 이용실적 과 접근성 개선 등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 우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독립 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양성평등한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회 제공이며, 하위 목표는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성별 참여율 등 분석이다. 둘째, 여성연구자의 연구 참여 확대 및 경력유지이며, 하위 목표는 출산·육아휴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체인력 및 복귀 지원이다. 셋째, 여성 기업가 양성을 통해 양성평등한 사업 역량 체계 구축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 창업가의 기술·경영·애로사항 진단 및 컨설팅 지원과 여성 ICT 기업인의 해외진출 지원이다.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6년 대비 2개 증가한 19개로, 일반·특별회계 7개와 기금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41억 2,6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984억 6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9억 9,700만원(3.2%) 감소한 3,025억 3,2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핵심연구(유형B)(최초신규)(R&D)	134,000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운영	372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지원(R&D)	실험실창업-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 탐색지원	43,500	성별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지역디지털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및 지원	7,115	
	지역디지털인재양성(자율)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17,441	
	지역디지털인재양성(제주)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845	
	지역디지털인재양성(세종)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853	
일반·특별회계 소계			204,126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원자력기금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1,811	
정보통신 진흥기금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1,600	중점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0,000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차세대보안리더(BoB) (차세대보안리더양성(BoB))	4,800	중점
		K-Shield 주니어	1,020	성별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2,376	
	ICT 창의기업 육성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977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융합서비스 글로벌마케팅 강화	365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교육훈련(메가프로젝트선도 인재글로벌역량강화)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13,600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클라우드개발자기술교육	1,058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정보화)	디지털윤리 교육	3,598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615	
		과학기술 진흥기금	과학기술 잠재인력 연구활력 제고(R&D)	이공계 장애 과학기술인 육성 및 경력개발지원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R&D))
여성과학기술인 혁신 성장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22,836			
기금 소계				98,406
총계			302,532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5	213,725	7	204,126	2	△9,599
기금	12	98,804	12	98,406	-	△398
합계	17	312,529	19	302,532	2	△9,99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2개, 64억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445억 2,0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 16개, 2,516억 1,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1	43,500	6	160,626
기금	2	6,400	1	1,020	10	90,986
합계	2	6,400	2	44,520	16	251,612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 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산출 근거 필요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핵심연구’는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일정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경력유지·개발 지원 도모를 성평등 목표로 두고 성과지표는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측정산식은 여성과학자에게 배분된 선정연구비를 핵심연구(유형B) 최초신규 전체연구비로 나눈 값으로 '25년 실적은 26.36%, '26년 추정치는 28.2%이다. '27년 목표치는 20.0%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인 기초연구사업 대상자인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 내외임을 참고하여 설정한 수치이다.

즉 성과지표는 연구비 금액을 기준으로 여성 수혜비율을 측정하는 반면, 목표치는 여성 연구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구성비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여성 연구자의 구성비 20%를 여성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최소 확보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제별 연구비 규모, 연구 분야 및 지원기간 등에 따라 실제 여성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연구비 비율은 여성 연구자 구성

비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연구자의 구성비만으로 여성 선정연구비 비율의 연도별 적정 목표치를 직접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지표만으로는 성평등 목표인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연구비 배분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여성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로 유지하려면 여성 연구자 구성비를 정책적 최소 확보 수준으로 활용하되, 성별 신청연구비와 선정연구비, 과제유형·연구분야별 평균 연구비, 최근 실적 및 2027년도 신규과제 예산규모 등 연구비 기준의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산출 근거 수록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분석 의견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핵심연구(유형B)(최초신규)(R&D))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 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	성과지표와 성과지표 산출 근거간 측정단위 불일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교육부의 성평등 목표는 네 가지이다. 첫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이다. 둘째,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며, 하위 목표는 보육서비스 확대 및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이다. 셋째,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고등교육 환경 조성,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대표성 제고 노력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다. 넷째, 양성평등한 주거 환경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대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이다.

2027년도 교육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대와 동일한 10개로, 일반·특별회계 9개와 기금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714억 4,8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815억 7,0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대비 103억 1,400만원(3.0%) 증가한 3,530억 1,800만원이다.

[교육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7,577	중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어린이집확충		18,674	
영유아 특별회계	시간제보육지원		32,238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사업		1,950	
	보육진흥원운영지원	어린이집평가운영	7,247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인건비	108,290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64,970	
고등·평생 교육지원	대학내성범죄근절 및		407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특별회계	안전환경조성			
	대학교육프로그램	국립대학양성평등조치계	74	
	평가인증지원	획평가및지원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10,021	중점
일반 · 특별회계 소계			271,448	
사학진흥 기금	행복기숙사지원사업		81,570	
기금 합계			81,570	
총계			353,018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 (A)	금액(B)	대상사업 (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9	273,513	9	271,448	-	△2,065(△0.8)
기금	1	69,191	1	81,570	-	12,379(17.9)
합계	10	342,704	10	353,018	-	10,314(3.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 2개, 375억 9,800만원이고 기타사업은 8개이며 3,154억 2,0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37,598	-	-	7	233,850
기금	-	-	-	-	1	81,570
계	2	37,598	-	-	8	315,420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를 운용상 사업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할 필요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12조 등에 근거하며, 자기개발 및 진로탐색에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남녀 대학생에게 양성평등한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7년 예산안은 100억 2,100만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3,300만원(14.7%) 감소하였다.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상학교를 각 대학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상 학교는 대학에 배정된 예산 및 인원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어학성적, 평점 등)에 따라 수혜자를 뽑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수혜자를 어학성적, 영어면접 등으로 직접 선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수혜자는 2026년 1,347명으로, 여성이 1,002명(74.4%), 남성이 345명(25.6%)이다.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지원자의 높은 비율, 선발기준인 어학성적과 평점에서 성별 격차, 현장학습 중 간호학과 같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의 구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별 수혜 분석]

		2024년	2025년	2026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체	1,374명	1,347명	1,347명
	여성(비율)	1,049명(76.3%)	1,002명(74.4%)	1,002명(74.4%)
	남성(비율)	325명(23.7%)	345명(25.6%)	345명(25.6%)

주: 2026년 수혜자는 추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성별 선발 비율’로 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남성지원자 중 남성수혜자의 비율 대비 여성지원자 중 여성수혜자의 비율로 산정되고 있으며, 동 성과지표에 따르면 2025~2026년의 경우 성과값이 약 0.93으로 나타나 지원자 대비 수혜자의 비율이 성별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자 선발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행기관이 성별에 따른 수혜 혹은 제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성별 선발 비율은 사업 운영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원자의 성별 선발 비율에는 해외연수에 관한 관심도, 어학성적 등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성과지표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 사업수혜자들의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목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성과지표	'25년 실적	'26년 추정치	'27년 목표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성별 선발 비율(%)	0.93	0.93	0.9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성별 선발 비율(%)	0.95	사업 목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법무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폭력 근절과 재범 방지이며, 하위 목표는 성범죄 근절과 재범 방지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다. 둘째는 범죄피해 등에 대한 보호·지원 및 인권보장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범죄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강화이다.

2027년도 법무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7개로, 일반회계 3개와 기금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73억 5,5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663억 7,0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예산 대비 12억 1,300만원(1.1%) 증가한 1,137억 2,500만원이다.

[법무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 회계	교정교화		13,834	
	전자감독		33,308	
	양성평등정책 지원		213	
일반 · 특별회계 소계			47,355	
범죄 피해자 보호기 금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12,305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744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066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3,255	
기금 소계			66,370	
총계			113,72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3	46,852	3	47,355	-	503(1.1)
기금	4	65,660	4	66,370	-	710(1.1)
합계	7	112,512	7	113,725	-	1,213(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모두 기타사업에 해당하며 총 7개 사업 1,137억 2,5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	-	3	47,355
기금	-	-	-	-	4	66,370
계	-	-	-	-	7	113,725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재설정 및 보완 검토 필요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강력범죄(흉악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방화 등)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심리적 피해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스마일센터)이며, 스마일센터를 통해 강력범죄에 따른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여성피해자 및 가족·보호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7년 예산안은 123억 500만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9,500만원 (7.8%) 증가하였다.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스마일센터 여성수혜자는 사업 시행 이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대상자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운영 사업수혜 분석]

		2024년	2025년	2026년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전체	2,773명	3,468명	3,121명
	여성(비율)	2,261명(81.5%)	2,791명(80.5%)	2,526명(80.9%)
	남성(비율)	512명(18.5%)	677명(19.5%)	595명(19.1%)

주: 2026년 수혜자는 추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으로 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스마일센터 지원 서비스 실적 중 심리지원, 법률지원, 임시 주거 지원, 사회지원 건수를 매월 취합하여 측정하고 있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심리·법률·주거·사회지원 등을 통합 연계하는 스마일센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지원 건수로는 심리지원을 제외한 여타 지원 영역의 성별 수혜 분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인지 대상사업의 영역을 스마일센터 심리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주거·사회지원으로 확장하여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운영 성과지표]

성과지표	'25년 실적	'26년 추정치	'27년 목표치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87,917	88,796	89,684

주: 2026년 추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과지표 재검토 및 보완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89,684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국방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군 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군 내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기반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양성평등인식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평화구현과정에서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 보장이다. 셋째,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현장중심의 예방대응 추진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이다.

2027년도 국방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도 동일한 7개로, 모두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19억 9,400만원(12.4%) 감소한 846억 9,100만원이다.

[국방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기본피복	여군 피복비 지원	800	
	진료지원	여군 부인과 이용 지원	140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68,157	
	보건복지지원	성인지교육	1,551	성별
	보건복지지원	성인지력 향상 대외위탁 교육	53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 및 성고충 상담활동	332	
	보건복지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운영	9,739	성별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63	
	보건복지지원	군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5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1,674	
	병영기본지원시설	여성 필수시설	2,039	
	PKO파병	개인파병	88	
일반·특별회계 소계			84,691	
총계			84,691	

주: 성별/중점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7	96,685	7	84,691	0	△11,994
기금	-	-	-	-	-	-
합계	7	96,685	7	84,691	0	△11,99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112억 9,0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 5개, 734억 1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2	11,290	5	73,401
기금	-	-	-	-	-	-
합계	-	-	2	11,290	5	73,401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 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지원’ 사업의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은 국방부 및 각 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국방부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자문, 심의·조정 기능 수행과 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조정하여 양성평등한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며, 성평등 기대효과로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군 내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실적(회)’로 설정되어 있다. 위원회 활동 횟수는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이 국방부 및 각 군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었는지, 군 구성원이 체감하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방문은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른 활동인데도 각각 1회로 동일하게 합산되므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하기 어렵다.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목표치는 19회로 2025년 실적 20회보다 낮고 2026년 추정치 18회보다 1회 높은 수준이다. 목표치 설정 근거로 2025년 실적과 2026년 추정치를 고려하였다고만 설명할 뿐, 국방부와 각 군별 연간 회의계획, 처리하여야 할 정책의제 수 또는 현장점검 필요 등을 바탕으로 19회를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단순히 최근 실적의 중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위원회 활동의 확대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의 자문·심의·조정 결과가 군 양성평등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동 횟수를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하면서, 위원회의 자문·권고 및 심의안건 중 정책·제도에 반영된 비율, 개선과제의 이행률, 권고사항의 처리기간, 전년도 미이행 과제의 후속조치율 등 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는 연간

회의계획과 정책의제, 과거 권고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설정하고, 개최 횟수와 권고·이행 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위원회가 단순히 정해진 횟수만큼 활동하였는지가 아니라 군 양성평등정책의 개선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실적(회)	19	위원회의 자문·심의·조정 결과가 군 양성 평등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제로 반영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표는 ‘재난에 대한 양성평등한 대응역량 강화’이며, 이에 대한 하위 목표는 ‘재난관리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며, 이에 대한 하위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경제활동 지원’이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개로, 모두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안은 2026년 31억 9,700만원 대비 5,400만원(1.7%) 감소한 31억 4,3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 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 경비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50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52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856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 강화	233		
	일반·특별회계 소계			3,143
총계			3,143	

주: 성별/중점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행정안전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없으며, 기타사업은 4개, 총 31억 4,300만원 규모이다.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4	3,197	4	3,143	-	△54
기금	-	-	-	-	-	-
합계	4	3,197	4	3,143	-	△5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	-	4	3,143
기금	-	-	-	-	-	-
합계	-	-	-	-	4	3,143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와 실제 사업 수혜자 모두 여성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 참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동 지표가 성평등 개선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경제활동과 사회 정착 지원 등을 성차별 개선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 자체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사업대상자 3만 4,537명 중 여성은 2만 4,944명으로 72.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은 이미 사업대상 집단에서 상당한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사업수혜자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사업대상자의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사업수혜자 1만 2,658명 중 여성은 1만 82명으로 79.6%를 차지하여,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인 72.2%보다 7.4%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의 높은 사업수혜 비율이 단순히 사업대상자의 성별 구성에 따른 결과에 그치지 않고, 사업대상자 구성에 비해 여성에게 수혜가 추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2027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 관련 여성 참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80%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사업대상자 중 여성의 비중이 이미 72.2%이고 실제 사업수혜자의 여성 비중도 7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성 참가율을 80%로 설정하는 것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적절한 성과목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는 특정 성별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 자체보다는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과 남성 간에 존재하는 경제·사회적 격차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여성 참가율 지표는 여성과 남성 간의 경제활동, 소득, 사회정착 또는 사업 참여 효과 등의 성별 격차가 개선되었는

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 구성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여성에게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 참여와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남성에 비해 어떠한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은 사업대상자의 72.2%를 차지하는 데 이어 사업수혜자에서는 79.6%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성별 수혜 격차가 성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여성 참가율 80%의 설정 근거와 성평등 개선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여성 참가율 중심의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7년 목표치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 민 지원 사업 관련 여성 참가율(%)	80	특정 성별의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별 격차 완화를 측 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이 성별과 무관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로 여성전문인력의 교육 참여율만을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재난관리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학·석·박사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성평등 목표로 성별 구분 없이 교육생이 재난관리 분야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성평등 기대효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 성과지표는 ‘재난관리 분야 여성전문인력 교육 참여율’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체 교육 참여자 중 여성 교육 참여자의 비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7년 목표치도 여성 교육 참여율 26%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정도가 아니라 특정 성별의 교육 참여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학위과정의 운영 및 학생 선발도 대학이 홍보와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 교육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점 등을 제공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역량보다 성별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여성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성평등 성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성과지표는 여성과 남성 간 교육 참여의 차이가 사업 추진을 통해 개선되었는지, 또는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완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보다는 전체 교육생 가운데 여성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참여율을 별도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논리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 교육 참여율을 단순히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성평등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격차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7년 목표치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재난관리전문 인력양성	재난관리 분야 여성전문 인력 교육 참여율(%)	26	재난관리 전문성이 성별과 무관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참여율 중심의 성과지표를 재설계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 내 경력단절 예방이며, 하위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일자리(취·창업) 참여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단절 예방이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분야별 성인지감수성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확대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예방교육 강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이다. 셋째, 양성평등 콘텐츠, 언어문화 등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양성평등 언어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콘텐츠 제작시 양성평등 관점 반영이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6년 대비 1개 감소한 18개로, 일반·특별회계 11개와 기금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455억 4,9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1,100억 3,8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대비 651억 5,200만원(22.4%) 증가한 3,555억 8,700만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 회계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11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장르별 인재양성-방송분야 전문 인재양성-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1,484	성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방송분야 노무·성평등 교육)	22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600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1,13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15,967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기업 지원	6,51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440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11,619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994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2,334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325	성별· 중점
일반·특별회계 소계			245,549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50,622	
	체육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진흥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체육인재양성)	798	중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11,637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23,28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15,894	중점
관광진흥 개발기금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330	
영화발전 기금	영화정책지원	공정환경조성사업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운영지원)	349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영화인 역량강화교육지원	7,123	
기금 소계			110,038	
총계			355,587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2	195,811	11	245,549	△1	49,738
기금	7	94,624	7	110,038	0	15,414
합계	19	290,435	18	355,587	△1	65,1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3개, 180억 1,7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28억 9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 15개, 3,360억 8,6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1,325	2	2,809	10	242,740
기금	2	16,692	-	-	5	93,346
합계	3	18,017	2	2,809	15	336,086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어언어문화를 잘 이해하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배포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어 연구 및 자연어 처리, 한국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및 산업계 등을 포함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언어 연구를 위한 성평등을 고려한 대규모 언어자료 구축이며, 성평등 기대효과로 대규모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성별 편향 없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등 기술 발전에 지원·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 사업에서 확인하여야 할 성과는 말뭉치의 성별 편향이 완화되었는지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 시 발화자 성별 구성 비율 차(%)’로 설정되어 있다. 발화자 수의 성별 구성 차이를 줄이는 것은 말뭉치의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발화자 수가 비슷하더라도 성별 발화 시간이 다르거나 또는 성별 고정관념 등에 대한 표현이 언어자료에 포함되면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에 성별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말뭉치에 참여한 여성과 남성 발화자의 수적 구성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만으로 말뭉치 내용의 성별 편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는 일상대화 수집 대상자의 성별 구성 차이를 계속 줄이기 위하여 2027년 목표치를 10.5%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년 추정치보다 0.5%p 낮은 10.5%를 달성하면 성평등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해당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성별 구성 차이를 줄인다는 방향만으로 목표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기대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 시 발화자 성별 구성 비율 차(%)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적 평가가 어려움 - 성별 편향 완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농업·농촌 분야 여성 역량 강화로, 하위 목표는 여성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 여성전문인력 및 경제인 육성, 성별 구분 없이 청년(18~39세) 대상 스마트팜 청년 인력 육성이다. 둘째는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확대로, 하위 목표는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노동문화 조성이다.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대와 동일한 10개로, 모두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55억 9,400만원(5.3%) 증가한 3,103억 4,5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36,071	성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	21,295	중점
		여성농업인역량강화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48	중점
	농촌고용인력지원		38,422	성별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25,747	
	농식품모태펀드출자		55,000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교육	4,003	중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78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8,194	
	농기계임대(자율)		24,797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88,982	
일반·특별회계 소계			310,345	
총계			310,345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0	294,751	10	310,345	0	15,594
기금	-	-	-	-	-	-
합계	10	294,751	10	310,345	0	15,59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3개, 253억 4,6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744억 9,3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 6개, 2,105억 6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3	25,346	2	74,493	6	210,506
기금	-	-	-	-	-	-
합계	3	25,346	2	74,493	6	210,506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별 수혜 분석 예산 현황 작성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사업은 농업·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성평등 증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수행 결과가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청년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선발 평가 시 농어촌 거주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해 제시한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지원사업 신청자)는 2026년 기준 총 3,346명으로 여성 1,019명(30.5%), 남성 2,327명(69.5%)이고 사업수혜자는 총 1,941명으로 여성 610명(31.4%), 남성 1,331명(68.6%)이다.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은 여성 59.9%, 남성 57.2%로 여성이 남성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현황은 2026년 기준 전체 961억 1,800만원 중 여성 301억 8,100만원, 남성 659억 3,7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 분석 예산 현황은 사업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총예산을 배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년	2025년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율)	전체	83,370	101,545	96,118
	여성(비율)	17,341 (20.8)	29,280 (28.8)	30,181 (31.4)
	남성(비율)	66,029 (79.2)	72,265 (71.2)	65,937 (68.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동 사업의 2025년도 실집행액은 690억 3,100만원으로 집행액 961억 8,400만원 대비 7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¹⁾ 부처는 「2027년도 성인 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²⁾에 따라 본예산을 기준으로 성별 수혜 분석의 예산 현황을 작성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해선 성별 수혜 분석 시 사업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 현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사업의 2025년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예산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 · 전 용 등	예 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영농정착 지원금	101,545	101,545	-	-	-	101,545	96,184 [69,031]	101,545	96,184 [69,031]	-	5,361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01,545	101,545	-	-	-	101,545	96,184 [69,031]	101,545	96,184 [69,031]	-	5,3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II-1)」, 2026.3.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 현황을 작성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예산 현황 비중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실집행액이 아닌 집행액(지자체 교부액)을 기준으로 성별 수혜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 성별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과대·과소 평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예산 현황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청년농 육성 정책 기조 전환(양→질)으로 청년농 선발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를 50~70%로 지원하고 있다.
- 2) 성별 수혜 분석의 예산현황은 당해연도 총액에 작성한 '26년도 예산금액(본예산)과 일치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예산 변경 여부' 사유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성별 수혜 분석의 예산 현황 작성 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예산 현황의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사업은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지원 및 2~3년차 지원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통해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 분석 시에도 각 연차별 지원 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현황 및 성별 비율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 산출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6,11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88,982백만원
가. 영농정착지원금 95,415백만원 · 영농정착지원금 : (신규4,426명×1.1백만원) +(2년차2,798명×1.0백만원) +(3년차4,767명×0.9백만원)×12개월×70%×95% = 95,415백만원	가. 영농정착지원금 88,252백만원 · 영농정착지원금 : (신규3,238명×1.1백만원) +(2년차4,426명×1.0백만원) +(3년차2,798명×0.9백만원)×12개월×70% = 88,252백만원
나. 선발운영비 703백만원 · 선발운영비 : 15개도×94백만원×50% = 703백만원	나. 선발운영비 730백만원 · 선발운영비 : 15개도×97백만원×50% = 73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별 수혜 분석 예산 현황 작성 개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의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율)	농업·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청 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종합 지원	예산의 정확한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해 성 별 수혜 분석 시 사업의 실행행액을 기준으 로 예산 현황을 작성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며, 하위 목표는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둘째, 학대·폭력피해예방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통한 학대·폭력피해예방 지원,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이다. 셋째,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및 복지 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및 기반 마련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8개로, 일반·특별회계 23개와 기금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6조 2,437억 4,1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647억 4,1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대비 5,924억 2,300만원(10.4%) 증가한 6조 3,084억 8,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해산장제급여		54,749	
	자활사업	자활근로	785,478	중점
	자립준비청년		16,517	
	자립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1,387	
	장애인활동지원		3,150,755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86,950	
		발달재활서비스	182,000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5,806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004	중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68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454,812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79,266	중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766	
	장애인건강보건의료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1,3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3,711	중점
	노인보호전문기관		13,65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9,438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10,374	성별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7,610	성별
	사회복지사관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 운영	200	
	개도국개발협력사업 (ODA)		34,7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7,752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88,1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40,38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17,88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6,275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	8,068	
일반·특별회계 소계			6,243,741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성·생식건강증진	744	
		난임극복지원(난임부부지원)	23,641	
	건강증진사업관리	음주폐해예방관리	1,245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2,804	
	에이즈 및 성병예방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HIV/AIDS 진료비·치료비 지원 -지자체보조(진료비 지원))	7,407	
국민연금 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8,900	
기금 소계			64,741	
총계			6,308,482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22	5,639,277	23	6,243,741	1	604,464
기금	6	76,782	5	64,741	△1	△12,041
합계	28	5,716,059	28	6,308,482	0	592,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4개, 1조 904억 5,900만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개, 179억 8,400만원, 기타사업 24개, 5조 2,000억 3,9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4	1,090,459	1	17,984	19	5,135,298
기금	-	-	-	-	5	64,741
합계	4	1,090,459	1	17,984	24	5,200,039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 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의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급여 지급 여부와 수준이 수급자격과 정액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성별에 따른 수혜 격차가 생길 여지가 크지 않다. 출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계기일 뿐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은 성별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성별 차이를 사업으로 완화하거나 관리한다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 전원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급여가 수급가구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별형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수혜자 또한 성별 비교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성평등 목표 또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으로 되어 있어, 성별 격차 완화나 성평등 증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사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수혜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 차이를 사업으로 완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산장제급여는 급여가 개인이 아닌 수급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수혜자를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일반적인 복지 목적을 서술하는 데 그쳐, 사업 성과를 성별 관점에서 측정하거나 환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해산장제급여는 성인지 대상사업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유
해산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사망 시 급여 지원	지급 대상·수준이 성별과 무관하게 결정 되는 보편적 급여로 성별 형평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목표 상향 조정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7년 목표치 3만명은 2025년 실적 3만 138명과 2026년 예산상 인원 3만 6,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최근 실적과 예산 반영 인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활근로’ 사업은 상대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근로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취·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자활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들로서 지급여부 결정이나 지급액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성별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동 사업은 여성이 단순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참여가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지고 탈수급이 촉진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유입이 증가하여 수혜를 받는 여성의 비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성과지표를 여성 비율이 아닌 참여자 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7년의 목표인 3만명은 2025년 실적인 3만 138명보다 낮고 2026년 예산에 반영된 인원 3만 6,000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재검토 필요 사유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수(명)	30,000	참여자 수 목표가 2025년 실적·2026년 예산상 인원보다 낮게 설정되어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고 하위 목표로는 ①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②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③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가 있다. 둘째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고 하위 목표는 아동 돌봄 지원 강화이다. 셋째는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이고 하위 목표는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이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6년 대비 1개 감소한 31개로, 일반·특별회계 13개와 기금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7,727억 7,1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6조 6,724억 8,2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대비 8,959억 7,000만원(9.6%) 감소한 8조 4,452억 5,3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 회계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585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80,646	중점
	해외취업지원		34,820	중점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11,028	중점
	내일배움카드(일반)		725,620	중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14,400	성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7,633	중점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923	중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697,808	중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상담지원)	1,644	중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4,329	중점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19,747	중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30,588	중점
일반 · 특별회계 소계			1,772,771	
고용보험 기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18,353	중점
	내일배움카드(고보)		410,980	중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35,749	중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하이테크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3,300	중점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77,426	중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1,261	중점
		전문기술과정	6,317	중점
		중장년특화과정	10,759	중점
		하이테크과정	11,153	중점
	고용안정장려금	위라밸일자리 장려금	83,938	중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1,417	중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04,318	성별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7,026	
	모성보호육아지원		4,271,020	중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381,438	중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346,048	성별
	장애인취업지원		31,278	중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34,478	중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65,398	중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5,789	성별 중점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근로자건강보호	근로자건강센터	27,229	성별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6,727	
근로복지 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지원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080	
기금 소계			6,672,482	
총계			8,445,253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6		2027(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4	2,892,149	13	1,772,771	△1	△1,119,378(△38.7)
기금	18	6,449,074	18	6,672,482	-	223,408(3.5)
합계	32	9,341,223	31	8,445,253	△1	△895,970(△9.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 28개, 7조 6,378억 4,0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5개, 7,977억 8,400만원이며 기타 사업은 4개, 154억 1,8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1	1,757,786	1	14,400	1	585
기금	17	5,880,054	4	783,384	3	14,833
계	28	7,637,840	5	797,784	4	15,418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과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2027년 성과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 강화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촉진’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 참여자의 취업률(%)’이고, 고용노동부는 2027년 성과목표를 51.3%로 설정하고 있다. 동 목표치는 2025년 실적치인 54.2% 대비 낮고, 2026년 추정치인 51.3%와 같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4년(‘22~’25년)간의 평균 취업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50%대에 머무르는 기존 취업률을 만족스러운 성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를 동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적어도 최근 연도 실적치인 54.2%를 상회하는 목표치여야 충분히 도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급격한 기술발전예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여성참여비율(%)’ 및 ‘일반고 특화훈련 여성참여비율(%)’이다. 이 중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여성참여비율(%)’의 2027년 성과목표는 37.5%로, 2025년 실적치인 39.5%, 2026년 추정치인 39.0%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동 목표치의 설정 근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 평균 여성참여비율’이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대한 남성 선호가 높음을 고려할 때 30% 후반대의 여성참여

비율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선이라고 한다면, 현상 유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훈련 사업의 여성참여비율 실적치는 2023년 35.5%, 2024년 37.6%, 2025년 39.5%로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2025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한 2027년 성과목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과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2027년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여성 참여자의 취업률(%)	51.3%	2025년 실적치(54.2%) 대비 저조하게 설정되어 도전적이지 못함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여성참여비율(%)	37.5%	2025년 실적치(39.5%) 대비 저조하고, 최근 3년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가. 현황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 5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 2개 등 총 7개의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성평등정책의 총괄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내 성별균형 제고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목표로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추진 하며,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일 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및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일 가정 양립기반 강화 및 가족가치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두 가지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이를 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와 ‘성매매 피해여성 및 청소년 지원’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 청소년, 가족과 소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를 하위 목표로 두고 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6년 대비 13개 증가한 47개로, 일반·특별회계 36개 세부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 5개 세부사업 및 양성평등기금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8,723억 7,6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8,664억 4,500만원이며,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2026년 대비 379억 6,600만원(2.2%) 증가한 1조 7,388억 2,100만원이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통계·예결산 분석 연구)	162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20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3,713	
	국제개발협력(ODA)		744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지원(ODA)		3,116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854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23,358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2,614	
	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문화확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83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1,003	
	여성사전시관		60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4,140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73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273	중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기념사업		82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1,672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70	
		중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707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171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1,817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사업	290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1,19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4,28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5,37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97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3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	951	
	가족역량강화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956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중점
	아이돌봄지원		501,48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비(가족친화지원사업)	830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48,4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99,939	중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054	성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율)		4,002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제주)		24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세종)		4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자율)		91,50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제주)		1,04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세종)		1,496	
일반·특별회계 소계			872,376	
청소년육성 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5,87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92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3,11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9,67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3,131	
양성평등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6,623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321	성별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6,783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96,39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1,87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67,968	
기금 소계			866,445	
총계			1,738,821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25	855,713	36	872,376	11	16,663
기금	9	845,142	11	866,445	2	21,303
합계	34	1,700,855	47	1,738,821	13	37,96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 3개, 1,032억 8,2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753억 7,5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 42개, 1조 5,601억 6,4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3	103,282	1	31,054	32	738,040
기금	-	-	1	44,321	10	822,124
합계	3	103,282	2	75,375	42	1,560,164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을 ‘고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는 청소년상담사의 고용상 성별격차 개선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통한 성평등한 상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동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을 ‘양성평등의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사업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는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9억 5,100만원이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본방향과 목적을 기반으로 성별에 따른 특수성과 보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이며, 성평등 기대효과는 ‘성평등 의식,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 등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한 청소년상담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이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¹⁾에서는 대상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을 분류할 때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은 해당 사업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성인지 예산사업으로서 해결하려는 성별 격차 또는 달성하려는 성평등 효과와 연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는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의 3개 정책목표 아래 7개 영역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용’ 영역은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조건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반면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 등 개인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 및 성 역할 규범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다.²⁾

1) 기획예산처,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6.

2)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5.12.

이러한 지표체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 사업을 ‘고용’ 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다소 정합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성인지 예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 목표는 여성 청소년상담사의 취업 확대, 고용률 제고 또는 청소년상담 분야의 성별 직종분리 개선 등에 있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상담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상담 과정에서 성평등한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 및 기대효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양성평등의식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노동시장 또는 고용정책이 아닌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교육환경 성차별 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³⁾ 이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성평등 정책적 기능이 상담사의 고용여건 개선보다는 성인지적 인식 및 상담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상담환경의 성차별 개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고용’ 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 영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구분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국가성평등지수 영역 분류 재검토 사유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운영지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리)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고용	성평등 목표가 고용격차 개선 보다 성인지 감수성 및 성 역 할 고정관념 개선에 있으므 로, ‘양성평등의식’ 영역으로 의 변경 검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3)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57쪽, 2023.4.

(2) 별도 사업 편성을 통한 사업별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이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 정책기반 구축 사업과 사업목적·지원방식·수혜자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은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조정, 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7년에는 여기에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사업’, ‘제4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이 포함되어 총 233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기존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조정·협의 예산은 2억 4,000만원,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은 2억 6,000만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5,000만원인 반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228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약 97.6%를 차지한다.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2026년 여성사전시관 사업의 불용예정액을 전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7년에는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는 생리대 및 지급기 설치와 지자체 운영 지원 등에 215억 1,800만원,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10억 2,000만원, 사업 운영 관리 등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기존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과 사업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존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조정, 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성평등지수 분석 등 주로 정책기획·조정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공시설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설치하고 국민에게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및 지방보조사업이다.

특히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의 97.6%를 차지하게 되면서 세부사업의 명칭과 실제 재정투입 구조 간 괴리도 커졌다. 이러한 구조는 성인지 성과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상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의 성평등 목표는 ‘성평등정책 총괄·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으로, 성평등 기

대효과 역시 ‘성평등정책 현안의제 개발 등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설정되어 있다. 성과지표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로 설정되어 있어, 공공생리대의 실제 이용이나 생리용품 접근성 개선과 같은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기존 정책기반 구축 사업에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계속 편성하기보다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업목적과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은 성평등정책의 기획·조정 및 추진기반 강화라는 기존 목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이용실적, 생리용품 접근성, 시설별 이용량 및 이용자 만족도 등 현물지원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때에는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의 관계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의 9~24세 여성청소년(약 24만명)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53억 7,700만원이다. 두 사업은 생리용품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이 유사하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속적 구매비용 지원인 반면, 공공생리대 지원은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순간에 이용하는 보편적·긴급적 접근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중복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두 사업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단위사업과 담당 조직에 편성되어 있어(‘청소년정책 기반강화’ 단위사업의 독립 세부사업 / ‘정책협의 및 평가’ 단위사업 내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의 내역사업), 생리용품 지원정책 전체의 수혜대상, 재정규모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면서, 두 사업이 각각 담당하는 정책수요와 사각지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지속적인 구매비 부담 완화를, 공공생리대 지원은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시적인 생리용품 접근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대상과 성과지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두 사업의 이용실적, 수혜대상, 단위비용 및 사각지대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여 지원방

식별 효과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자원배분과 사업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두 사업을 하나의 정책군으로 연계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별도 편성 및 관련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별도 사업 편성 필요사유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조정·협의 등)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조정, 성평등정책 전략센터 운영, 국가·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기획·조정 및 연구 기능을 중 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을 통해 생리용품을 직접 제공하 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과 사업 목적·지원방식·수혜구조가 상이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와 지급 기를 상시 비치하고 지방자치단 체 사업운영 및 중앙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생리용품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사업 예산의 97.6%를 차지 하나, 현행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 표로는 이용실적 및 생리용품 접 근성 개선 등 사업성과를 측정하 기 어려우므로 별도 세부사업으 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공시설을 통한 보편적·긴급 적 접근성 지원으로 기능을 명확 히 설정할 필요 -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 원' 사업과의 정책대상·지원방식· 성과지표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정책군 차원의 연계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설정의 적정성 제고와 성별 수혜분석 보완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중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내역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남녀 근로자에게 미치는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성별 수혜분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5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5억 2,000만원은 인증사업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신규인증 1,000개사, 유효기간 연장 600개사 및 재인증 500개사에 대한 심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서 성인지 예산서상 정책대상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며, 성평등 목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2024년 사업대상자를 636만 3천개로 기재하고 그 통계출처를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사업수혜자는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기관으로서 2024년 6,502개사, 2025년 6,971개사이며, 2026년에는 7,300개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사업대상자의 경우 「전국사업체조사」의 전체 사업체 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정책대상은 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자의 통계단위와 포괄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 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실제 사업수혜자를 비교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의 범위와 기업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통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수혜자로 제시된 가족친화인증 유효기업·기관 수는 당해연도에 인증심사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기관 수가 아니라 기존 인증기업을 포함한 연말 기준 유효 인증기업 수이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인증 유효기

업 6,971개사 중 당해연도 심사 통과기업은 2,956개사이다. 따라서 제도의 확산 규모를 나타내는 인증 유효기업 수는 유지하되, 재정투입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심사비 지원기업 수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기업·기관을 직접 지원하지만 궁극적인 정책효과는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에게 귀착되는 만큼, 성별 수혜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증심사 시 성별 육아휴직 이용률 및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증기업 내 남녀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증심사 자료만으로 인증 이후의 성평등 개선 효과를 직접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재인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별 제도 이용실적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의견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 대상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 모집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누적 유효 인증기업과 당해연도 심사비 지원기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 인증기업의 성별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등을 활용하여 남녀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할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공간정보 분야의 양성평등한 인재 양성 지원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 인재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진출 확대 도모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능력을 갖춘 석·박사 여성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둘째,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양성평등한 이동권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휠체어 이용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으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실현한다.

2027년도 국토교통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개로, 일반회계 1개와 교통시설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안은 2026년 대비 82억 3,600만원(3.5%) 증가한 2,443억 3,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공간정보융합핵심인재양성	200	중점
교통시설 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	244,135	
일반·특별회계 소계			244,335	
총계			244,335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2	236,099	2	244,335	-	8,236
기금	-	-	-	-	-	-
합계	2	236,099	2	244,335	-	8,23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 1개, 2억원이고, 기타사업은 1개, 2,441억 3,5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200	-	-	1	244,135
기금	-	-	-	-	-	-
합계	1	200	-	-	1	244,135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의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중 내역사업인 ‘공간정보융합핵심인재양성’은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인재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성평등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성별을 고려하는 요소가 없어 사업의 목적·성과지표·추진내용이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융합핵심인재양성’ 사업은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평등 목표는 여성 인재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진출 확대이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능력을 갖춘 석·박사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실제 장학생 선발 시 선발 기준에 성별을 고려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여성 장학생 비율은 2024년 40.0%, 2025년 25.0%에서 2026년에는 36.4%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데, 이는 해당 연도 지원자와 선발자 구성에 따른 사후적 결과에 가깝다.

아울러 이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중점사업은 보통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 부여되는 분류라는 점에서, 특정 학문분야의 장학사업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예산서 내 수치 정합성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2025년 성과지표 실적은 31%로 제시되어 있으나 같은 해 성별 수혜분석상 여성 장학생 비율은 5명/20명, 즉 25.0%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재검토 필요 사유
공간정보융합 핵심인재양성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장학생 선발·지원	선발 과정에 성별 고려 요소가 없고 성인지 목적·지표·내용 간 연계성 낮으며 성과지표와 수혜분석 간 정합성 미흡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분야 조기 진출 도모, 중소기업 인력 유입경로 확보이다. 둘째는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지원확대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의 재기 지원이다.

2027년도 중소기업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6년 대비 7개 감소한 15개로, 일반·특별회계 8개와 기금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6,718억 3,6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은 6조 3,672억 7,90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2026년 대비 9,712억 7,700만원(12.1%) 감소한 7조 391억 1,5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547,731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27,920	
	여성기업육성		11,497	중점
	장애인기업육성		14,157	
	마케팅지원사업		41,641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성장도약지원	1,150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23,492	중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4,248	
일반·특별회계 소계			671,836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성장기업지원자금(용자)		1,489,800	
	창업기업지원자금(용자)		1,689,800	
	재도약지원자금(용자)		840,000	
	연수사업		34,079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성별/ 중점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5,225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재가지원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지원)	38,375	
	소상공인용자		2,270,000	
기금 소계			6,367,279	
총계			7,039,115	

주: 성별/중점란의 성별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중점은 성평등추진중점사업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3	1,163,281	8	671,836	△5	△491,445
기금	9	6,847,111	7	6,367,279	△2	△479,832
합계	22	8,010,392	15	7,039,115	△7	△971,2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별로 보면,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2개로 금액은 349억 8,9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없다. 기타사업은 13개이며 7조 41억 2,6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평등추진중점		성별영향평가		기타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34,989	0	0	6	636,847
기금	0	0	0	0	7	6,367,279
합계	2	34,989	0	0	13	7,004,126

주: 1.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내역사업이 각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세부 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이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그 세부사업은 각 분류에 중복계산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6.9.

나. 분석 의견

(1)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구조개편에 따른 수혜자 감소분을 여성기업인에게만 일괄 적용하는 등 성과목표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목표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인지 사업 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부터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까지 전 주기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매출액과 수출실적, 업력 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여성 경제인 육성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성평등 목표로, 여성 경제인의 지식기반 경제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여성기업인 수혜비율(%)’로,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대비 여성기업 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성과지표 실적은 2025년 11.7%, 2026년 추정치는 11.8%이다. 중소기업부는 2027년 목표치를 사업 구조개편에 따른 수혜자 규모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6년 추정치에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Δ 16.2%)을 적용한 산출치(9.9%)보다 0.1%p 높은 10.0%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표는 지원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이므로, 전체 지원과제 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율이 비율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사업 규모 감소율을 비율 지표에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으로 판단되며, 산출치 대비 0.1%p 상향한 수준으로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중소기업부도 여성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확대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사업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여성기업의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동 사업의 2027년도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실적(11.7%)과 2026년 추정치(11.8%)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최근 실적 수준(11.7~11.8%)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R&D)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10.0	성과지표는 지원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이므로, 전체 지원과제 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율이 비율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 규모 감소율을 비율 지표에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으로 판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록

국제성평등지수

2026년 새로 발표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한국은 0.693점으로 145개국 중 101위,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 GCI)는 평가대상 OECD 29개국 중 28위이다. 일부 점수와 구성지표가 개선되었으나 두 지수의 종합순위는 전년과 같다.

[한국의 국제성평등지수 현황]

지수	발표기관	기준연도	한국 점수	그룹 또는 순위
GDI	유엔개발계획 (UNDP)	2023	0.959	그룹2
GII		2023	0.038	12/172
GGI	세계경제포럼 (WEF)	2026	0.693	101/145
GCI	The Economist	2026	-	28/29

주: 1. GDI 그룹은 1로부터의 절대 편차로 구분함

2. GII는 낮을수록, GGI는 높을수록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냄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5, 2025.5.6.;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2026.9.16.;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26.

유엔개발계획(UNDP)은 매년 「Human Development Report(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UN회원국 대부분의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다. GDI는 건강·교육·생활수준의 3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간개발 성취를 비교하며, GII는 생식 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의 성별 불평등을 측정한다. 다만 「HDR 2025」 이후 GDI와 GII가 갱신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 기준이 되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구분(교육, 건강, 돌봄, 고용, 소득, 의사결정)을 준용하여 각 지수의 하위 지표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성평등지수의 종합순위 및 영역별 지표 구성]

영역	성개발지수 (GDI)	성불평등지수 (GII)	성격차지수 (GGI)	유리천장지수 (GCI)
교육	평균 교육연수	중등교육 이수율	문해율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교육연수		초·중·고등교육 취학률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모성 사망률	건강 기대수명	
		청소년출산율	출생 성비	
돌봄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여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아동보육비용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추정 1인당 국민총소득		유사업무 임금성비	성별 임금 격차
			추정소득	
의사결정		여성의원비율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가수장 재직기간	

주: 국제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구분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구분을 준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자료: UNDP(GDI, GII), WEF(GGI), The Economist(GCI)

가. 개요

GGI는 WEF가 2006년부터 발표하는 지표로,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으로 구성된 4개 영역에 대한 14개 지표로 점수를 산정한다.

GGI는 국가의 자원이나 발전 수준보다는 남녀의 성취 격차를 측정하며, 대체로 여성/남성 비율을 성평등 기준에서 상한 처리하므로 여성 우위가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상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를,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를 의미한다. 단, 출생 성비의 평등 기준은 0.944, 건강 기대수명의 평등 기준은 1.06이다.

영역	지표	산정 방법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¹⁾
	추정소득	남성 대비 여성의 추정소득 ²⁾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의 남성 대비 여성 비중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종사자의 남성 대비 여성 비중
교육수준	문해율	남성 대비 여성의 문해율 ³⁾
	초등교육 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의 초등교육(6-11세)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의 중등교육(12-17세)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대학교) 취학률 ⁴⁾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남아 대비 여아 출생 수 ⁵⁾
	건강 기대수명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수명
정치적 권한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의 남성 대비 여성 비중
	장관 비율	장관의 남성 대비 여성 비중
	국가수장 재직기간	총리급 이상 남성 대비 여성 재직연수(최근 50년)

주: 1. 경영자 의견조사를 통해 측정.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와 같으며, 응답은 7점 척도로 구성

2.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성별 인구를 결합하여 남성 대비 여성 임금으로 산정

3.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4. 고등학교 졸업 직후 연령(일반적으로 18세)부터 5세 연령구간의 인구 대비 대학교 재적 학생수

5. 여아 기준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 성비와 정의가 다름에 유의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나. 현황

2026년 한국의 GGI는 0.693점으로 145개국 중 101위이다. ‘경제참여와 기회’는 0.608점으로 120위, ‘교육수준’은 0.984점으로 97위, ‘건강과 생존’은 0.976점으로 34위, ‘정치적 권한’은 0.203점으로 80위이다.

종합점수 상위 10개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및 정치적 권한 점수는 모두 낮다. 특히 정치적 권한은 0.203점으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낮은 스웨덴의 0.506점에 미치지 못했다. 건강과 생존 점수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중 나미비아 다음으로 높아 다른 영역과 대조된다.

한편 교육수준 점수가 0.984점으로 높으면서 순위가 97위인 것은 다수 국가가 성별 격차를 크게 줄여 점수가 상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GGI 상위 10개국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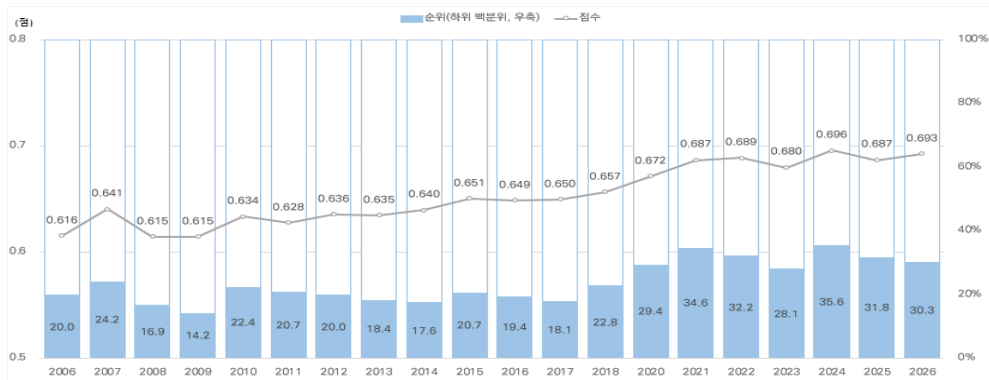
전체 순위	국가	GGI	영역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	아이슬란드	0.930	10	0.815	84	0.990	119	0.961	1	0.954
2	핀란드	0.872	13	0.791	1	1.000	68	0.971	2	0.728
3	노르웨이	0.857	23	0.769	52	0.997	122	0.960	3	0.704
4	나미비아	0.845	11	0.800	44	0.998	1	0.980	7	0.603
5	영국	0.842	30	0.759	1	1.000	101	0.965	4	0.646
6	뉴질랜드	0.828	48	0.735	1	1.000	103	0.964	6	0.613
7	스웨덴	0.823	7	0.824	1	1.000	113	0.962	13	0.506
8	호주	0.819	18	0.779	79	0.991	93	0.965	9	0.539
9	독일	0.817	80	0.696	88	0.989	91	0.966	5	0.616
10	아일랜드	0.814	29	0.761	1	1.000	111	0.963	10	0.533
...										
101	한국	0.693	120	0.608	97	0.984	34	0.976	80	0.203
...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다. 추이

한국 GGI는 2006년 0.616점에서 2026년 0.693점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수준'과 '건강과 생존'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참여와 기회' 및 '정치적 권한'이 낮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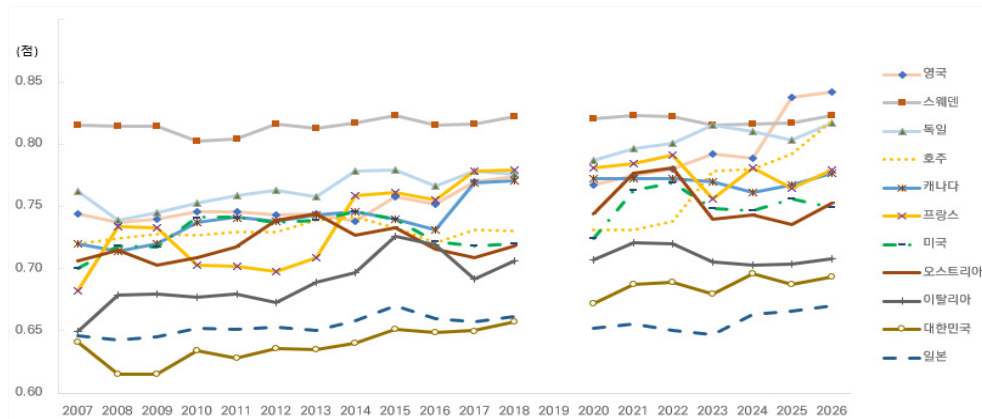
[한국 GGI 점수 및 순위 추이]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각 연도별 「Global Gender Gap Report」

[주요국 GGI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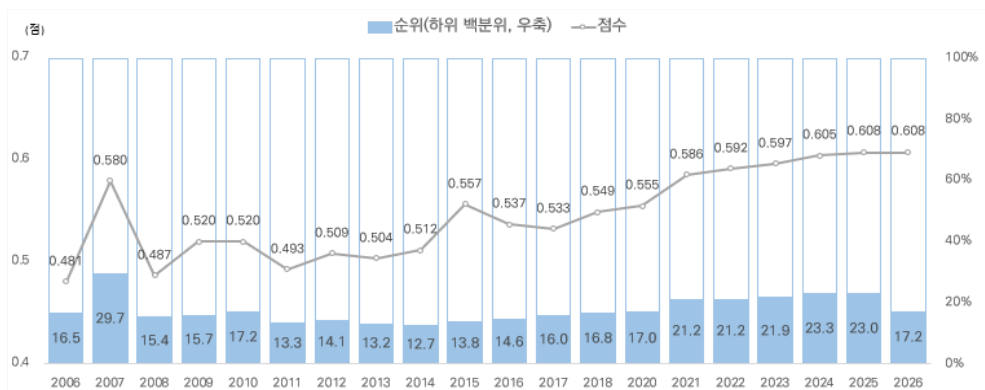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각 연도별 「Global Gender Gap Report」

한국의 '경제참여와 기회' 점수는 2006년 0.481점에서 2024년 0.605점, 2026년 0.608점으로 장기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점수는 정체되어 있으며, 2026년 순위는 120위로 4개 영역 중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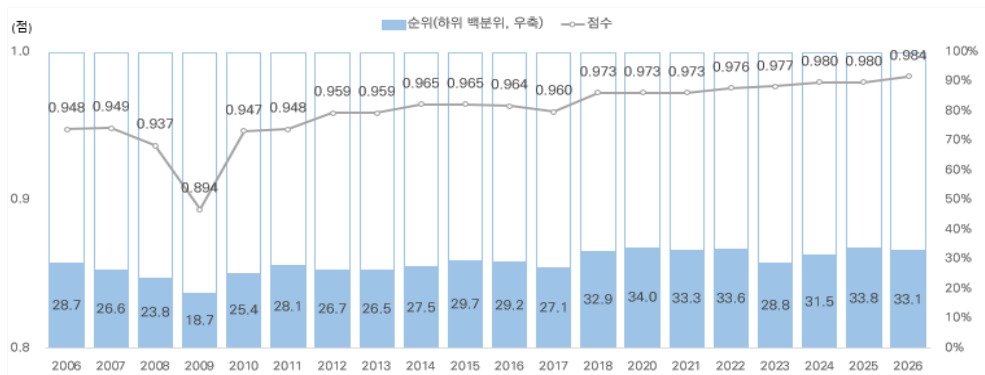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점수 및 순위 추이]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한국의 '교육수준' 점수는 2006년 0.948점에서 2024년 0.980점으로 높아졌고, 2025년 같은 수준을 유지한 뒤 2026년 0.984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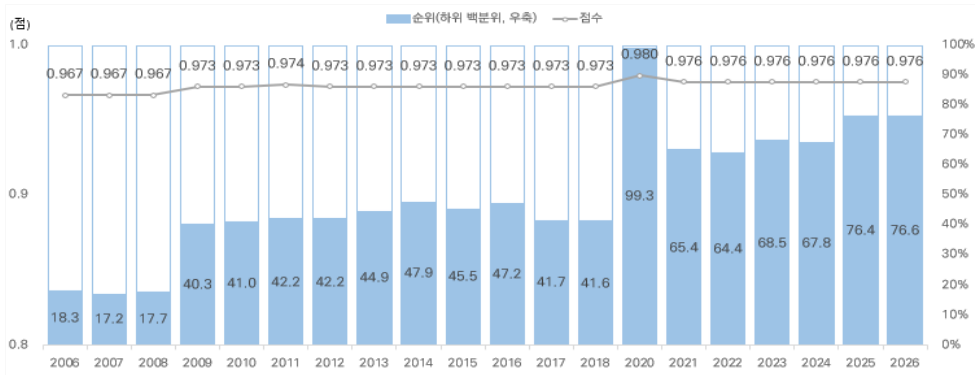
[교육수준 분야 점수 및 순위 추이]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한국의 '경제참여와 기회' 점수는 2006년 0.967점에서 2020년 약 0.980점으로 높아진 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0.976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출생 성비는 성평등 기준 0.944에 도달했으나 건강 기대수명 성비는 1.048로 이 지표의 평등 기준 1.06보다 낮다.

[건강과 생존 분야 점수 및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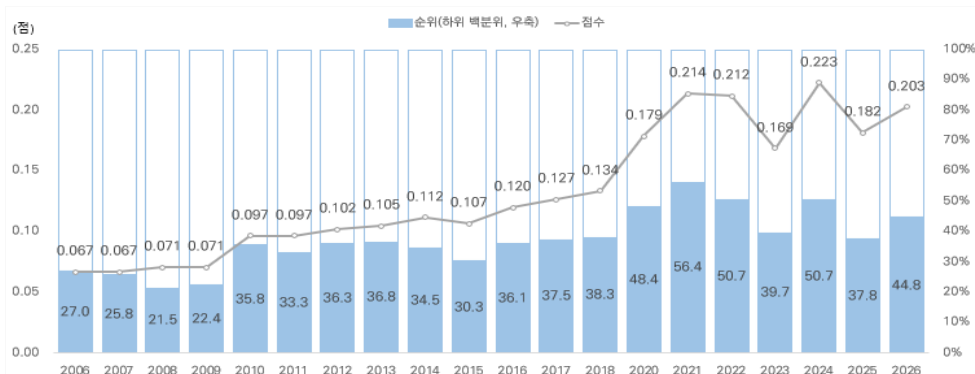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한국의 '정치적 권한' 점수는 2006년 0.067점에서 2024년 0.223점까지 높아졌으나 2025년 0.182점으로 낮아진 뒤 2026년 0.203점으로 반등하였다. 2026년 점수는 2006년보다 0.136점 높지만 2024년보다 0.020점 낮다.

[정치적 권한 분야 점수 및 순위 추이]



주: 2019년 별도 발표판 없음

자료: 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6」

가. 개요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 GCI)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 201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지수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29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직업적 기회와 고위직 진출 여건을 평가한다.

GCI에서 사용하는 10개 지표는 고등교육 이수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 아동보육비용, 여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다.

[GCI의 구성 및 영역별 지표]

지표	정의
고등교육 이수율 성별 격차	25~64세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남성의 이수율을 차감한 값(%)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차감한 값(%)
성별 임금격차	(남성의 중위임금-여성의 중위임금)/(남성의 중위임금)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위 관리직(최고경영자, 임원 등에서 여성의 비율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	상장 기업의 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
아동 보육비용	(아동보육비용)/(평균임금)
여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여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남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에 응시하는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26」

나. 현황

2026년 한국의 GCI 순위는 평가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유급휴직의 제도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만, 임금격차와 여성의 기업 의사결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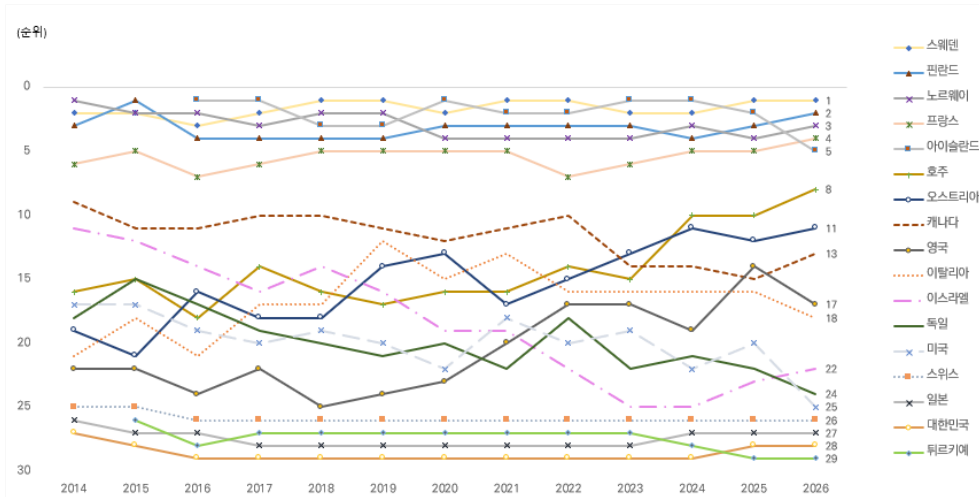
2026년 한국의 GCI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29개국 중 28위로 2025년과 같다. 영역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29.0%로 평가대상국 중 29위이고,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17.5%로 28위, ‘여성 이사회 비율’은 19.4%로 27위이며, ‘고등교육 이수율 성별 격차’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도 각각 27위, 26위이다. 반면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지표는 1위, 여성은 5위이며, ‘GMAT 시험 여성 응시율’은 3위이다.

[2026년 GCI 현황]

전체 순위	국가	지표별 순위									
		고등 교육 이수율	경제 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고위 관리직 비율	여성 이사회 비율	아동 보육 비용	유급 출산·육아 휴직 기간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여성 국회 의원 비율
								여성	남성		
1	스웨덴	2	2	9	1	17	17	12	10	13	5
2	핀란드	3	1	24	12	16	2	8	11	4	4
3	노르웨이	4	4	4	16	3	9	9	6	20	11
4	프랑스	20	7	8	7	1	14	19	14	6	13
5	아이슬란드	1	12	13	10	18	19	13	5	29	2
6	뉴질랜드	14	13	2	9	7	13	24	28	19	3
7	덴마크	7	6	5	24	4	21	17	17	2	7
8	호주	11	11	14	4	5	23	26	25	10	1
9	포르투갈	10	5	12	11	19	11	16	7	24	14
10	폴란드	6	23	15	3	24	22	7	12	5	19
...											
27	일본	24	24	27	29	26	7	11	2	27	28
28	한국	27	26	29	28	27	10	5	1	3	29
29	튀르키예	26	29	11	27	28	16	23	24	1	27

자료: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26」

[GCI 순위 추이]



주: 아이슬란드의 2014~2015년, 튀르키예의 2014년 수치 없음

자료: The Economist, 연도별 「The Glass-Ceiling Index」

여성 고위관리직 및 이사회 비율은 각각 OECD 평균을 하회한다. 특히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11.0%보다 18.0%p 크고,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15.0%p로 OECD 평균 -13.8%p보다 1.2%p 더 크다.

[2026년 한국 GCI 영역별 점수]

(단위: %p, %, 주)

항목	대한민국	OECD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 성별 격차 (%p)	-2.5	7.6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p)	-15.0	-13.8
성별 임금격차 (%)	29.0	11.0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	17.5	35.2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 (%)	19.4	33.6
아동 보육비용 (%)	8.0	14.0
여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주)	47.6	31.0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주)	41.0	8.4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	44.9	34.3
여성 국회의원 비율 (%)	20.3	34.3

자료: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26」

다. 추이

한국의 GCI는 2024년 29위에서 2025년 28위로 상승한 뒤 2026년에도 28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의 구성지표를 비교하면 교육·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줄고 여성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와 유급휴직 지표가 높아진 반면, 아동 보육비용은 상승하였다.

2016년 대비 2026년 고등교육 이수율의 성별 격차는 -7.6%p에서 -2.5%p로 5.1%p,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1.6%p에서 -15.0%p로 6.6%p 축소되었다. 성별 임금격차는 36.7%에서 29.0%로 7.7%p 축소되었으며,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11.0%에서 17.5%로 6.5%p, 여성 이사회 비율은 2.1%에서 19.4%로 17.3%p 상승하였다.

아동 보육비용은 평균임금 대비 0.0%에서 8.0%로 8.0%p 증가하였으며, 여성 유급휴직은 25.3주에서 47.6주로 22.3주 확대되었다. GMAT 시험 여성 응시율은 32.8%에서 44.9%로 12.1%p,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에서 20.3%로 4.0%p 상승하였다. 다만,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관리직·이사회 진출 등 주요 지표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GCI 영역별 점수 추이]

항목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고등교육 이수율 성별 격차 (%p)	-7.6	-7.2	-6.9	-6.6	-5.6	-6.6	-4.3	-4.0	-3.5	-3.3	-2.5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p)	-21.6	-20.8	-20.5	-20.3	-19.7	-18.9	-18.8	-18.1	-17.2	-15.9	-15.0
성별 임금격차 (%)	36.7	36.7	36.7	34.6	34.6	32.5	31.5	31.1	31.2	29.3	29.0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	11.0	10.5	10.5	12.5	14.5	15.4	15.6	14.6	16.3	16.3	17.5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 (%)	2.1	2.4	2.1	2.3	3.3	4.9	8.7	12.8	16.3	17.2	19.4
아동 보육비용 (%)	0.0	0.0	5.6	3.0	3.0	3.0	3.0	3.0	5.0	5.0	8.0
여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주)	25.3	25.3	25.0	25.0	25.1	25.1	28.1	34.0	30.6	37.8	47.6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주)	16.1	16.1	17.2	17.2	15.4	15.4	22.7	25.2	22.1	29.2	41.0
GMAT 시험 여성 응시율 (%)	32.8	32.9	32.4	35.7	37.9	36.2	36.6	44.9	43.2	44.6	44.9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6.3	17.0	17.0	17.0	16.7	19.0	19.0	18.6	19.1	20.0	27.1

주: 각 연도는 GCI 발표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구성지표의 통계 기준연도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The Economist, 연도별 「The Glass-Ceiling Index」

2026년 GGI와 GCI에서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한국의 종합순위는 전년과 동일하며, 노동시장과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는 국제지수의 순위 변화 자체보다 개별 사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성별 격차와 그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이 여성의 관리자 진입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GGI의 전문·기술직 성비는 0.999로 남녀 비중이 유사하지만,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성비는 0.221에 그쳤다. 정치적 권한 점수도 0.182에서 0.203으로 상승하였으나 4개 영역 중 가장 낮았으며, GCI의 여성 고위관리직 및 이사회 비율 역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한 여성 참여 인원이나 비율뿐 아니라 경력유지, 관리자 진입 및 의사결정 참여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후속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취업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임금·승진 기회의 성별 격차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점수는 0.608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순위는 114위에서 120위로 하락하였다. GCI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의 성별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임금 격차는 29.0%로 평가대상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 확대뿐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 임금 및 승진 기회 개선 등을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교육 성취가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GGI 교육수준 점수는 2026년 0.984로 성별 격차가 작은 수준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여성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전체의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가 축소될 수 있으며, 경력 축적에 따라 관리직에 진입하는 여성 인력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육 성취의 확대만으로 고용·임금·승진의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32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